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관 계 부 처 합 동

순서

I . 한국경제의 실상	1
II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
1. 기술선도 성장	4
2. 모두의 성장	17
3. 공정한 성장	27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31
[첨부 1] 한국경제의 실상(상세)	37
[첨부 2]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45
[첨부 3]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설문조사 결과	53
[별 지] 2025년 경제전망	1
[별 첨] 2025년 상세 경제전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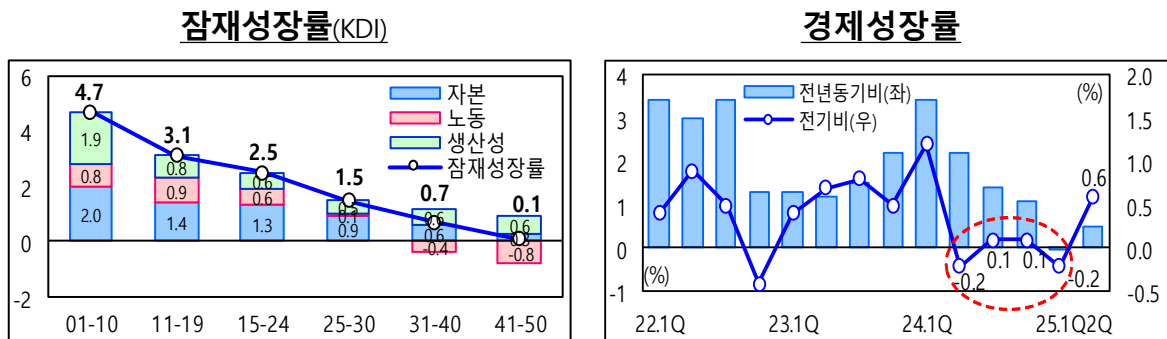
I . 한국경제의 실상

- ◇ 그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 3050 클럽중 7번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 국가로 발전
- ◇ 그러나 이는 추격경제 下 역사, 지금 경쟁상대는 글로벌 Top 선진국
- ◇ 선도경제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 위협받는 상황

① (성장)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급락*,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미달**

* '10년대 3%대 → '25년 1% 후반 → '30년 1% 초중반 → '40년대 0%대

** '24.2Q~'25.1Q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후 '25.2Q 0.6%로 반등(전기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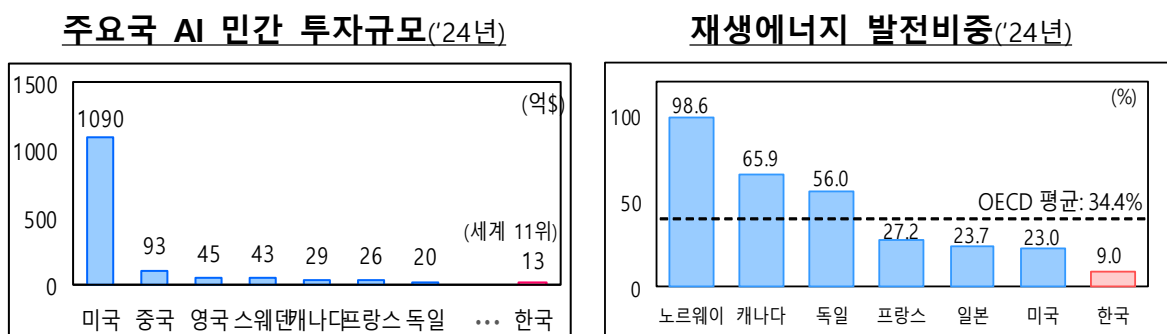
○ DX에는 성공했지만 AX·GX가 지연되는 가운데 中 기술 추월 + 美 관세로 세계무역질서 근본적 변화 → 中企는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

* 美 대비 AI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4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中)0.9 (유럽)1.0 (韓)1.3 (日)1.5년

* 시가총액 10대 기업 中 '90년대 이후 신생기업은 1개(대기업 계열 제외시 없음, 미국은 6개)

* 글로벌 수출 점유율(% '10→'24): [화학] (韓)2.9→3.6 (中)6.1→12.1 / [철강] (韓)4.7→4.8 (中)10.9→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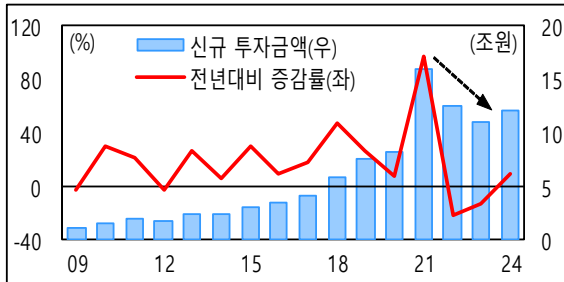
*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 ('24.2Q)5.4 (3Q)4.7 (4Q)3.3 ('25.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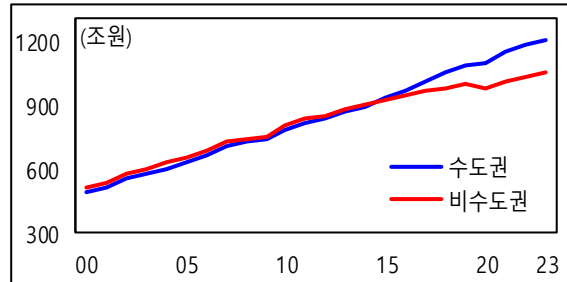
② (구조) 양극화 심화로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이 성장 기회·과실에서 소외

* ①사상 첫 자영업 폐업 100만명 상회('24)/ ②청년 고용률(%p_{동기비}): ('25.2Q)△0.9/ ③노인빈곤율 OECD1위, 39.7%('22)/ ④1분위 소득 1년전보다 감소: ('25.1Q)△1.5%, 취약차주 연체율(%): '227.2→'249.9

신규 벤처투자 추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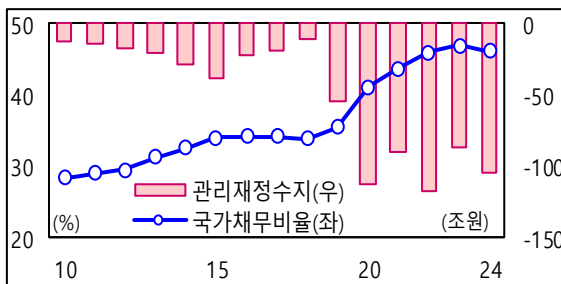
③ (재정·세수) 총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 대부분이 의무지출*에 사용되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부족

* 의무지출(조원): ('23)340.3 ('24)347.4 ('25)365.0 <'21~'25년 평균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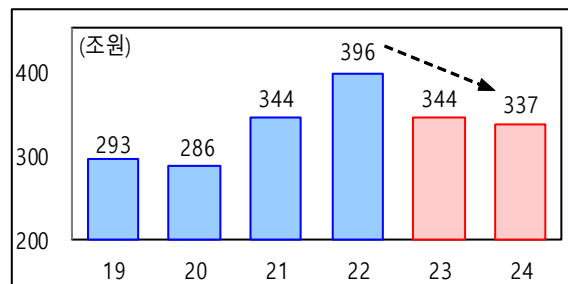
○ 재량지출은 低생산성·低성과(선택과 집중 부족),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도 크게 훼손 →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악순환

* 조세부담률은 '22년도 22.1% → '24년도 17.6%까지 크게 하락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국세수입 추이



◇ 우리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

◇ 다행히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 **마지막 골든타임**

⇒ **추격경제**下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 필요

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진짜성장” 패러다임

◇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 ① 구체적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টে을 목표(King pin)로 설정
- ② 국가의 모든 역량(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총동원해
선택과 집중(高성과 분야 과감히 투자, 低성과 분야 구조조정)
- ③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 창출

❖ 핵심 아이টে별 ①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②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 ③기재부는 지원·뒷받침 → 추진단 구성해 전방위 집중 지원

⇒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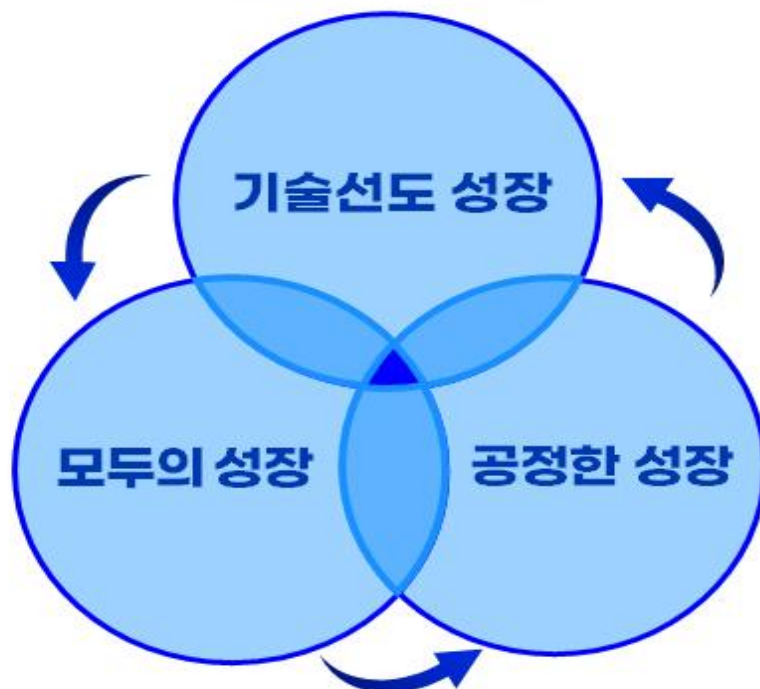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몇 개나 만드느냐가 관건

비전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성장” 구현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정책
방향



지속성장 기반 강화

1. 기술선도 성장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25.下부터 즉시 추진해 최우선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지원

- R&D·시범사업에 선제적 재정지원(R&D 예산 대폭 확대, 예타 제외·면제), 기업 투자에는 ^{가칭}국민성장펀드^{금융},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 전력 등 공공분담 확대^{입지}
- 인재 양성, 유출 방지, 해외인력 유치 등 전방위 인재 확보
- 핵심 아이템별로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

⇒ 성장전략 TF를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아이тем별 세부 과제 집중 점검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 확정·추진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AI 대전환(15)		초혁신경제(15)	
기업	▶ AI 로봇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 AI 자동차		▶ LNG 화물창
	▶ AI 선박		▶ 초전도체
	▶ AI 가전		▶ 그래핀(Graphene)
	▶ AI 드론		▶ 특수 탄소강
	▶ AI 팩토리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 AI 반도체		▶ 해상풍력·HVDC
공공	▶ AI 복지·고용		▶ 그린수소·SMR
	▶ AI 납세관리		▶ 스마트농업
	▶ AI 신약심사		▶ 스마트수산업
국민	▶ 국내 AI인재	K-분업	▶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 해외 AI인재		▶ K-바이오·의약품(AI 바이오)
기반조성	▶ 공공데이터 개방		▶ K-콘텐츠(게임, 웹툰 등)
	▶ 데이터 활용		▶ K-뷰티(통합클러스터)
	▶ 국가 AI 협력		▶ K-식품

❖ AI 대전환은 인구총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

* AI 적극 도입시, 한국경제 생산성 1.1~3.2%, GDP 4.2~12.6% 제고 가능(한은, '25.2)

- 특히, 우리는 IT 기반(광케이블·HBM 등) 탄탄 + 제조 역량(Full-Stack)·
암묵지 보유 + AI 시대 “쌀”인 데이터도 풍부하게 축적

⇒ AI “경제·사회 대전환” + “기술 대전환” 동시 추진해 성과 극대화

- (경제·사회 대전환)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
국민 쏠분야 AI 활용 촉진 + 기반조성 →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적 필요성·파급력·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

- 기업 중심 + 관계부처 협업下 추진단을 구성해 성과 창출 전방위 지원

- (기술 대전환)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통신 인프라 확충, AI 분야
원천기술 확보, AI 기반 모델 개발·공급 등 통해 기술 대전환 뒷받침

◇ (경제·사회) 기업·공공·국민 등 쏠분야 AI 대전환 + 데이터·거버넌스 등 기반조성

① [기업] 7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시행해 제조 AI+X → 피지컬 AI 1등 도약

- (7대 선도프로젝트)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25.下)해 R&D·실증지원·규제완화·판로·금융 등 패키지 지원

피지컬 AI	7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AI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핵심부품 등) 및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 물류 휴머노이드부터 선도적 실증·보급 →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 확산 * 업종별 특화 지능형 군집로봇 시스템(4족 보행 로봇 등), 고중량 핸들링 휴머노이드 등 ↳ 예) [조선] 보강재 자율이동 용접로봇, 선박블록 협소공간 작업용 다족 보행 로봇
▶ AI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버스·택시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 (기술개발)AI자율주행 핵심기술 집중투자(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AI SW 등) (산업생태계)민관합동 정책협의체(얼라이언스) 구성, 인력 양성,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개최 등 (데이터)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원본 영상데이터의 AI 연구개발 목적 활용 허용 (실증)속도제한 등 전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 AI 선박	▶ <u>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u> * 예) 지정된 운항내역 내에서 선박 시설·승무 정원 등 기준 완화
▶ AI 가전	▶ <u>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u> * 리모컨 없이 음성·제스처로 실내 제어, 감성케어 및 식재료·식단·건강관리 등
▶ AI 드론	▶ <u>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u> * 드론 비행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검사 요건 합리화 등 ※ AI 항공·소방드론부터 선도적으로 개발, 실증·보급 추진('25.下~)
▶ AI 팩토리	▶ <u>주력 제조업(자동차 등)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시설·장비 도입 등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u> * 예) [화장품] 점도·배합비 등 공정 최적화, 무인화·자율화로 오염 차단 등 - <u>제조 거점 중심으로 AI 팩토리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추진</u> - <u>AI 기반으로 고속연기술자의 현장 전문지식(암묵지) Database 구축</u>
▶ AI 반도체	▶ <u>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실증 지원</u> * 수요 대기업(자율주행차·IoT·가전·협동로봇·무인드론)과 국내 팹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를 연계해 개발

- (AX-Sprint 300)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쏠분야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X 전환 지원 프로젝트 신설

* 예) 자동 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 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2 **[공공]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 (3대 선도프로젝트) 복지·고용 등에 우선 적용해 민원처리·업무 효율화

공공부문	3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AI 복지·고용	▶ AI를 활용해 그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 <u>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u>
▶ AI 납세관리	▶ AI 세무상담·검색 도입('26년),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u>홈택스를 전면 개편('27년)해 납세편의 제고, AI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u>
▶ AI 신약심사	▶ AI를 활용한 신속한 <u>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u> 등을 통해 <u>신약허가 심사기간 대폭 단축 및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 자동처리</u> * 제네릭의약품 허가에 우선 적용('26.3Q) → 신약허가 등 단계적으로 확대

-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AI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

- **(공공AX 확산)** 공공 AX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소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국민체감형 시범사업 추진
- **(AI 사업절차 단축)** AI 정보화 사업은 예산 편성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를 완화*해 사업착수기간 대폭 단축(2년 → 1년 이하)
 - * (현행) 2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예산요구시 ISP 수립이 선제적으로 요구 → (개선) ①ISP 면제기준 상향(20→50억원 미만), ②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본사업 편성 가능, ③'27년부터 ISP 수립예산과 최초년도 구축 사업비를 동시 편성하는 방안 검토
- **(공공수요 창출)** 혁신제품 시범구매, AX·AI 바우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AI 분야 초기 수요(마중물) 창출

③ **(국민) 인재 양성 + 해외유출 방지 + 해외인재 유치 3대 전략 추진**

① **(인재 양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 AI '한글화'***

*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대상	교육과정	실행기관
▶ 초·중·고생	▶ 연령대별 AI 이해 및 리터러시, AI 활용 사고력·문제해결력 함양	창의재단·EBS
▶ 대학생	▶ 비전공생의 AI 활용 교육 및 일반교양 차원의 기본 AI 교육	KAIST ·방송통신대
▶ 청년·군인	▶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의무복무형 AI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업준비 → AI 전문인력화	한기대·산인공 ·국방부
▶ 일반국민	▶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교육	소진공 ·NIA
▶ 전문가	▶ AI 융복합 인재 양성, 첨단 AI 기술 동향, 고급실습·문제해결 중심 교육, 해외 최고급인사 초청 강연	4대과기원

▪ AI 교육센터(온·오프라인) + 자격 인증제도 + 경진대회* 통해 뒷받침

* 경진대회 입상자는 벤처·창업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② **(유출 방지) 최고급 인재 국내정착 위해 급여·병역특례 등 파격 지원**

▪ **(처우개선)** 국립대 AI 교수(AI 대학 비전임)에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 **(병역특례)**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

* (현행)소부장·반도체 분야 인원배정 우대 → (개선)AI분야 추가(병무청 고시개정)

▪ **(겸직 활성화)**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AI 관련 대학 교원의 관련분야 국내외 교육기관, 민간산업체 등 겸직 활성화

* 예) 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자문, AI기반 공공정보 분석기업 운영시 허가

③ **(해외인재 유치·활용) 현지인재와 공동연구 확대 등 국경없는 인재 활용***
하고,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 통해 외국인재 유치

* 국내외 탐티어 연구기관간 글로벌공동연구, 인재파견, 협력거점 구축 등 포괄지원 확대
AI·SW 아카데미 사업 등 우수 참여 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 예) 현행 첨단산업분야에 한정된 Top-Tier 비자(요건: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年 소득 1인당 GNI 3배이상)를 연구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분야 특성에 맞게 요건을 설정

▪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연구비 지원하고,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일몰연장, '25→'28년)* 해 인재 복귀 촉진**

* 5년이상 국외거주후 복귀하는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술개발 경력자 대상

④ **(데이터) 데이터 개방, 융합·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 확대**

○ **(개방)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데이터 개방 확대****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5개)/ 데이터 안심구역(14개) 각각 데이터망 구성해 상호 접근권한 부여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위험 가명자료 표본 데이터셋 반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신설***

* (수요자)데이터 요청 → (공공기관)원스톱서비스 신청 → (가명처리 전문기관^{개보위 지정})가명정보 제공

▪ **공공·민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및 표준체계 확립**

▪ **우선 문화 분야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저작물 실증특례 추진****

* KTV 영상데이터, 국가유산, 한국어 말뭉치 등 / ** AI 학습 활용시 '출처표시', '변경금지' 등 규제특례 적용

○ **(융합·표준화)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결합 등 활용을 촉진하고, 원본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지원**

* 메타데이터 표준 등 글로벌 범용 표준에 준해 한국화 작업, 통계·조사 등 분야별 특화 표준 마련

** 로봇·자율주행·제조·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축적·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인프라) 데이터 스페이스*를 산업별로 구축·연계하고, 전문대학 AI 교육인프라 조성·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특화 기술인력 양성**

* 공통 표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연계·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유통 환경
(예: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의료/미국), 우라노스 생태계(배터리모빌리티/일본), Catena-X(자동차/EU), Process-X(화학/EU))

⑤ [거버넌스] 정책협력 강화, 산학연 역량 결집,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 (정책협력)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 AI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공공부문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공공 AX를 평가에 반영(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 등)
 - * (중앙부처·지자체)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AI 사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 (공공기관) 공운위 산하 AI활용 소위원회 신설해 AI서포터즈 및 AI선도기관 운영
- (산학연협력) AI 기업(AI개발社, AI활용社, AI인프라社)·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축해 범국가적인 AI 연구·산업화* 협력 강화
 -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연구협력 증진(연구자원 공유, 공동연구 등), 해외진출 협력, 표준화 등
- 핵심기술 버티컬 AI 개발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협력) ODA·KSP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AI 표준 논의 선도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 (기술) 컴퓨팅·통신 인프라 확충, 모델 개발 등 AI 기술 개발 가속화

①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통신 인프라 대폭 확충

- (컴퓨팅인프라) 민관 협력해 GPU를 '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충
 - (전력)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방안 마련(예: 평가점수 우대 등)
 - (세제)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 * [일반] (대) 1% (중견) 5% (중소) 10% → [국가전략기술] (대·중견) 15% (중소) 25%
 - (규제)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을 제정해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입지·부대시설 규제완화, 관련 장비·SW 기술 자립화 지원 * 가칭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발의 추진('25.下)
- 추가로 민관 합동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 완화 등 검토
 - *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방향 마련해 국가AI전략위원회 의결·추진('25.9월)

- (통신인프라) 대규모 AI컴퓨팅 자원과 디바이스를 실시간·효율적으로 연결하는 6G 고성능 AI(Hyper-AI)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② [모델·원천기술]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

- (AI 기반모델)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
 - * 개발·확보된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확산 및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국방·안보 등 영역 포함)·경제·사회 AX 도모('26년~)
- (AI 반도체) AI컴퓨팅 인프라·온디바이스AI 등에 필수적인 저전력 NPU 등 기술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지원으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기 확립
 - * 국산 엣지向 NPU를 활용한 AI CCTV 및 재난 대비용 드론 등 개발·실증, 국산 서버向 NPU 기반 인프라 구축 등 공공분야 AX와 연계한 국산 NPU 도입·확산으로 초기시장 창출 지원
- (AI 실증단지) 인재·스타트업·데이터가 모여 AI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AI 특화 실증단지 구축
 - *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활용 규제프리존 적용, AI 테스트베드 구축 등

③ [법·제도] AI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 AI 안전 투자 강화

- (AI 기본법)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AI 기본법 개선* 및 하위법령 정비
 - * ^{EU}AI법 시행('26.8.), 기업 등 준비기간, 글로벌 동향, 국내 AI산업 여건 등 감안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
- (AI 안전)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지역·中企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스미싱 등 민생위협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 지원

❖ 15대 선도프로젝트별 기업, 주관부처·관계기관, 기재부(지원) 등 추진단 구성해 패키지 지원

* 現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기업·주관부처 등 지원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AI시대 핵심소재이나, 수입에 의존(90%) ▶ <u>핵심·상용화 기술개발 등 자립화 추진</u>(전기차,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활용) * (R&D)제품 양산 상용화 기술 개발 (인프라)실증을 위한 신규장비 추가 도입 검토 <p>⇒ 기술자립률 제고(현재 10→'30년 20%), <u>국내생산비중 확대</u>(현재 5%이하→'30년 10%)</p>
▶ LNG화물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운반선은 조선업 핵심 선종(매출액 50% 이상)으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방지(기술료로 선가의 약5% 지불) 위해 독자기술 개발 필요 ▶ <u>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 구축 등 화물창 기술 국산화</u> * (R&D)화물창 소재·부품 고도화 (인프라)극저온 보냉재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 (금융)대형선박 실증 위한 선박 2척 인수·개조 비용 융자 지원방안 마련 <p>⇒ 화물창 분야 기술독립 달성, LNG 운반선 점유율 제고('24년 55% → '30년 70%)</p>
▶ 초전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에너지, 교통,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전자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초전도체 핵심기술 확보 필요 ▶ 의료·첨단 바이오, 핵융합 등에 소형화·고성능화가 가능한 초전도 핵심·기반기술 고도화, <u>초전도 선재·자석 실용화·상용화</u>, 시제품 시험평가 핵심 연구인프라 확충 <p>⇒ 의료(MRI), 에너지(핵융합), 교통(자기부상열차)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혁신</p>
▶ 그래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배터리·연료전지 등 에너지소재로 활용 가능성 대, 사업화 초기단계(디스플레이 등 방열소재)로 미래 수요 대비 선제적 육성 필요 ▶ <u>원천기술 확보된 고효율 그래핀 상용화</u>(전기차 케이블, 이차전지, 반도체 등) 기술 개발 및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활성화 <p>⇒ 디스플레이 등 방열소재 시제품 → 에너지 소재·센서 분야로 상용화 추진</p>

<p>▶ 특수탄소강</p>	<p>▶ 고강도·경량화·내식성 등 특성을 갖춘 차세대 특수강에 대한 지원 및 개발 역량 확보가 산업 첨단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필수 조건</p> <p>▶ <u>수요산업 연계 성능한계 극복 특수강 소재·부품 개발 및 산·학 협력 인력 양성 추진</u></p> <p>* (R&D)자동차용 고강소 전기강판, 조선·에너지용 니켈강·고망간강 후판·강관 기술개발 등 (인력)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고정밀 특수강 제조 인력 양성</p> <p>⇒ '30년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 기술수준 세계 1위 도약('23년 3위)</p>
----------------	---

◇ 기후·에너지·미래대응

<p>▶ 태양광·차세대전력망</p>	<p>▶ 태양광과 ESS, AI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결합으로 전력계통 제약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p> <p>▶ <u>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BIPV: 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력 확보와 상용화에 R&D 지원*</u>을 집중하고, 트랙레코드 확보**</p> <p>*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적층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실증·BIPV 상용화 지원 신설</p> <p>**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상용화 단계 기술의 실증·테스트 기회 제공</p> <p>▶ '분산 전원(태양광, ESS) + AI 운영 S/W'의 분산전력 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실증</p> <p>⇒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p>
<p>▶ 해상풍력·HVDC</p>	<p>▶ 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이며, HVDC는 장거리 해저 전력전송이 가능한 기술로서 차세대 핵심 전력인프라</p> <p>▶ <u>핵심기술(풍력터빈*, 대용량 HVDC**) 및 풍력 연계기술(하부구조물, 타워, 선박) 병행 개발</u></p> <p>* 20MW+급 풍력터빈 개발 및 상용화 추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확보(~'30)</p> <p>**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27), 전력망 내 실증(~'30) 등</p> <p>⇒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해상풍력+HVDC+변압기' 기술 경쟁력 확보</p>
<p>▶ 그린수소·SMR</p>	<p>▶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그린수소 및 SMR에 대한 기술개발·실증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수출 동력화 추진</p> <p>▶ <u>그린수소 고효율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사업*</u>을 통해 생산역량·경제성 제고 + SMR 기술개발·실증지원,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으로 경쟁력 제고</p> <p>* 현재 11MW 실증사업 중(제주) → (향후)최대 100MW급 시범사업 추진</p> <p>** 부산·창원·경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p> <p>⇒ 그린수소 초격차 생산기술 확보 및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28) 추진</p>
<p>▶ 스마트농업</p> <p>▶ 스마트수산업</p>	<p>▶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바다에서 생육·사육이 어려운 환경에 대응해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으로 대전환해 식량안보 강화 필요</p> <p>▶ <u>스마트 농업육성지구('26.上)·양식단지('25.下) 각 1개소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u></p> <p>*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시설 집적화</p> <p>- 전문연구단을 구성해 AI 활용 스마트 농업·수산업 모델 설계를 지원·보급하고, AX 기반 농작업·양식 기술 등 개발 및 실증·확산</p> <p>⇒ 스마트 농업(원예)/수산업 도입률 확대 : ('24)16.2/2.5% → ('30)35.0/10.0%</p>

▶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분야 기술자립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간 기술이전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위성개발과 AI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 및 정밀 예측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산학협력 통한 고급인력 양성, 기술기반 창업 우주기업 전용 펀드(뉴스페이스펀드) 규모 대폭 확대 ▶ AI·위성영상* 활용 기후탐지·예측·영향평가 등 AI기반 미래기후 기술개발 지속 지원 <p>* 정지궤도위성(36,000km) 및 저궤도위성(2,000km이하)을 통한 양질의 기후·환경 데이터 확보 강화</p> <p>⇒ 국가 주력 산업화 및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재해 조기 대응 및 기후테크 선도</p>
------------------------	--

◇ K-붐업

▶ K-바이오·의약품 (AI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AI 바이오 및 신약 완제품 개발 활성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필요 ▶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 <u>가칭 국민성장펀드 등 활용 신약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 수립</u> <p>* 코로나19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및 국산화, 오가노이드·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제 R&D, 합성생물학 전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지속 지원 등</p> <p>⇒ 블록버스터 신약(연 매출 1조원 이상) 탄생, 해외 직접판매 확대(^{23년}0.2 → ^{30년}1.4조원)</p>
▶ K-콘텐츠 (게임, 웹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콘텐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성장 중(^{25년}200 → ^{33년e}1,753억불) → AI 기술로 K-콘텐츠 수익구조 다각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u>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통한 게임·웹툰 등 K-콘텐츠 투자 확대, 콘텐츠(게임·방송·OTT 등) 제작 쏠주기 AI 확산, AI 콘텐츠 인재양성, 게임·웹툰, 영상 등 大·中·小 협동 기술개발</u> <p>⇒ K-콘텐츠 수출 규모 확대(^{22년}132 → ^{30년}250억불)</p>
▶ K-뷰티 (통합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업 육성, K-할랄 화장품 수출확대 지원(해외인증 등) 등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 '24년 화장품 수출 순위: (1위)프랑스, 233억불, (2위)미국, 112억불, (3위)한국, 102억불 ▶ <u>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체험·문화·관광·산업융합) 육성(1곳) 통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u> <p>⇒ 중소 수출(^{24년}68 → ^{30년}100억불) 및 수출기업(^{24년}8,987 → ^{30년}10,000개社) 확대 [K-할랄 화장품 수출액 확대(^{24년}9 → ^{30년}15억불)]</p>
▶ K-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 시너지를 토대로 K-식품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전주기 종합 지원 -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주요 수출국 내 현지 물류 인프라(공동물류센터 등) 확대, 중소·중견 기업 시설·자금 지원 확대, 수출정보데스크(aT) 개편 등 ▶ 약 3조달러 규모(^{27년})의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통관지원, 상호인정 확대, K-할랄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 지원 추진 <p>⇒ K-식품 수출액 대폭 확대(^{24년}100 → ^{30년}150억불) [K-할랄 식품 수출액(^{24년}11 → ^{30년}18억불)]</p>

【가칭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

- ①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 활용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 →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

가칭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	
민간자금 50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일반국민 공모자금 + 연기금·민간금융 ▸ (역할) 풍부한 유동성 제공, 투자수익 향유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정부보증기반 기금채 + 산은자금 출연 ▸ (역할) 투자시 위험 先분담, 초저수익 대출

- ② (투자대상)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 관련 기술·벤처기업
- 특히,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 할당
- ③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 지원 +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
- ④ (거버넌스)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전략산업 판단 등 주요사항 결정 + 세부 펀드 운용은 민간중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운용실적 산경장 보고)

3

주력산업 고도화

◇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업종별】

- (석화) 범용(페트병, PE 등) → 고부가가치(반도체 세정액 등) 전환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 토대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 (철강)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 등을 위한 R&D 등 지원 확대
 - 업계 자율컨설팅, 민관 TF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방산) 재래식 무기 → AI 드론·로봇 등으로 재정을 재투자하고, 민간 개발후 軍 실증 등 기술 고도화 및 범정부 수출 총력 지원

【규모별】

- 대·중견기업 인프라·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개방형 혁신* 촉진 및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 고도화

* 예) 대·중견기업 과제(예: AI 공정혁신) 제안 → 정부 매칭 → 중소·벤처기업 R&D·실증자금 지원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로 녹색 대전환(GX)**

①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확충】

- (RE100 산단)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정주여건* 등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25.下)

* 예) 규제 프리,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

- (에너지 고속도로) HVDC(고압직류송전) 핵심기술 개발, 민간역량 활용*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31→'30)

* 사업자 범위에 민간사업자 추가 추진

- (차세대 전력망) AI 분산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및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육성

▪ 분산에너지가 안정적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 병행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 (보급 확대) 재생e 목표(~'30, 78GW) 상향 로드맵 수립·이행('25.下)

▪ 발전설비 설치 보조·용자 지원 대폭 확대('25년 0.5조원)

▪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하고, 지자체 이격거리 완화 추진 등 규제혁신

- (제도 개선) 재생e 보급제도(現 RPS)를 계약시장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②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감축】

- (감축 로드맵)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제출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31~'49년)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4기('26~'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유인 제고
- (탄소크레딧)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발표, 25.下)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탄소시장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신뢰성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탄소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 위한 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內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 구축('28년)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지속 추진

【자금공급 촉진】

- (녹색국채) 국채시장 선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개선
- (전환금융)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모태펀드 활용) 등 통해 전환금융 활성화
- (ESG금융 강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2. 모두의 성장

◇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해 **성장영역 확대**

1 지역균형성장

◇ 지방우대 정책체계로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체제 극복, 5극3특 균형성장

1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

【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 】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

초광역권	성장엔진(예시)
①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② 서남권 전북·광주·전남	·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
③ 대경권 대구·경북	· 로봇·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④ 중부권 대전·충청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R&D
⑤ 강원·제주권	· 관광, 청정 에너지, 바이오

* 구체적 성장엔진은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선정

- 중앙-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 지원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

- 방문·이동^{국토·문체} + 숙박·음식^{문체·농림} + 체험^{문체·지자체}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해 AI·빅데이터 활용, 규제프리 등 패키지 지원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연계거점	관광지	숙박	교통·안내	식음	쇼핑	체험·K-컬처
지원사업	관광지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개선	숙박 개·보수/ 서비스 개선/ 인력 양성	교통·안내 인프라 개선/ 교통망 확충	지역 특화 음식 홍보/ 상품 개발	쇼핑편의제고 지역 특화 기념품 개발	K-컬처 거점/ 관광상품 개발
통합지원	통합 홍보·마케팅 + 통합 상품 개발 + AI 기술 혁신 관광 서비스·체험 + 역내 교통 + 안내 체계 + 관광기업·스타트업 육성 + 인력 양성					
추진체계	범부처 관광 통합 지원체계 「(가칭) K-지역관광 TF」 구축 + 「K-지역관광 추진단」(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신설해 사업 총괄·집행					

- AI 활용*, 新트렌드·지역 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획기적 개선

* 예) AI 기반 서비스·콘텐츠 솔루션 개발·실증지원, AI 맞춤형 관광 비서 구축·활용 등

- 범부처 TF('25.8월) 통해 시범사업('26년) 추진(초광역권 2~3곳 선정*, ~'25년말)

* 예) K-컬처·역사·자연 등 지역관광 매력·차별성, 교통거점(공항, 철도, 항만 등), 내·외국인 관광객수 등 고려

【거점 육성】

-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 및 조속한 지방 이전 추진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25.下)

【지방 재정지원 성과제고 및 차등·우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 유도

* 지특회계 자율계정(포괄보조) 규모('25년 3.8조원 → '26년 10조원 이상) 및 대상사업 확대, 공모 방식으로 운영 중인 중·소규모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로 전환 추진

- 투자성과는 차년도 교부규모와 연계해 지자체 책임성 제고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시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 마련

② 지역 투자 촉진 및 소득 기반 확충, 재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지역투자 촉진】

- 수도권에서 지방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 現 지원내용 : ①지방이전 : 입지보조금(중소·중견기업), 설비보조금(기업규모 무관) 합산해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지원

②신·증설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조금만 지원하고 입지보조금 미지원

-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 연장('25→'30)

*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 상향(100→120%)

- 기업 본사·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25→'28년)

* (현행)7~12년간 50~100% 감면 → (개선)8~15년간 50~100% 감면

【 지역소득기반 확충 】

-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 마련('25.下) 및 선도사업을 추진('26)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의무화해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 도모

【 지역 재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력제고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개편*
 - * 예)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의 정주·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 강화*
 - * 혁신단과대학(학·석사과정 연계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신설, 임무 중심 R&D프로젝트 지원 등
-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하고, 북극 연안국*과 해운협력도 강화
 - * 미국,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해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역별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 등
-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및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AI 기반 창업·벤처 불입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① 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

- (발굴) AI 경진대회 개최, 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적극 발굴
- (투자확대)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가칭}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연기금·개인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 파격 지원

【모태펀드 확대】

- 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확대(예: 전체 모태펀드 예산 대비 20→30%) 하고,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 통해 혁신투자 리스크 분담
-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존속기한(現 ~'35년) 연장

【민간 벤처투자 활용】

-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예)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의 환매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연기금투자펀드) 연기금투자펀드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 (개인)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 (금융회사)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 ▶ (은행)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한 은행권 벤처 지분·펀드 투자 확대 유도
- ▶ (증권)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예:발행어음 등 조달금액의 25% 이상)
- ▶ (보험)적격요건 충족 벤처 투자시 K-ICS 위험계수 비상장주식 대비 완화(예: 49→35%)

- (법인)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현행)직간접 출자분, 민간 벤처모펀드 통한 출자분 → (개선)벤처투자조합의 SPC 통한 간접출자분

【회수 활성화】

-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구주 매입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약정총액의 20% 한도)하는 특례 연장 검토(現 ~'26년)

- (유니콘 기업 육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집중 육성·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2 AI 대전환, 스케일업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제조 AX) 중소·영세 제조기업 AI 활용 촉진(자동화장비 등) 위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
 - 제조AI 플랫폼(KAMP)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 전주기 원스톱 지원*
- (스케일업)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 제공

* (현행)제조데이터 정제·학습 및 모델 개발 지원, 제조라인 일부에 실증 지원
(개선)AX 전략 수립, 실증 및 성과검증, 공정에 적용 및 운영 프로세스 전반 지원

* 예) 혁신, 글로벌, 생산성 향상 등 성장지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성장기업 집중지원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면 애로지원** 병행

1 규모화·스마트화 통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규모화 지원
 - * 예) [제품·서비스]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
 - * 상권분석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에 이용자 맞춤형(예: 희망업종, 과거이력 등) 데이터 제공 등
 - 상권 규모·유형별로 대형·관광형글로벌 상권, 중형·산업형지역 대표상권, 소형·근린형소규모 골목상권 육성(∼'30, 상권르네상스 2.0)
- 업종별 데이터 세부분석 등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② 금융비용 · 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 (금융비용) 금융지원 추가 보장 및 대출갈아타기 확대

-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4.7.3 이전 대출→'25.6월 대출 포함)
가계대출 한도 확대(1천만원→5천만원, 사업자대출과 동일)
-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7년) 및 금리감면($\Delta 1\%p$) 특례 지원
-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원 공급
- ▶ (대출 갈아타기 확대) 가계대출 →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

○ (수수료 등)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하고,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일몰을 연장('25→'28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연장('25→'26년)

* (사용료)재산가액 3→1%로 감면(2,000만원 한도) (연체이자율)10→5%

○ (납세부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연장('25→'27년)해 원재료비 부담 완화

* (현행)기본한도: 30~50%, 우대한도(~'25년): 50~75% → (개선)우대 한도 '27년까지 연장

-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세사업자(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등) 중심으로 인하

* 카드 수수료율(신용/체크, %) : (영세사업자)0.8/0.5→0.4/0.15 (일반)0.8/0.5→0.7/0.4

○ (규제 합리화) 소상공인은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 (상병수당)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소득 수준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도입(시범사업 후 본제도 도입 검토)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분기별 300만원→연 1,800만원)

◇ 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 과실**을 취약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행복 증진**

①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서민 지원】

- (AI 격차 해소) AI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해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기본 역량 교육 강화
 - * 생활 SOC 시설(우체국·복지관 등) 활용해 AI 디지털배움터 32개소 구축('25.下)
- (기초생보) '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상향,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 * (적용대상)만 29세 이하 → 34세 이하 (공제액)40만원+30% → 60만원+30%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급지·가구별 1.7~3.9만원(4.7~11.0%) 인상
 -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생 12% 인상(+9.2만원) 등 평균 6% 인상
 - * (초등생)48.7 → 50.2만원 (중학생)67.9 → 69.9만원 (고교생)76.8 → 86.0만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 개선방안 추진
- (포용금융) 은행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시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노후소득보장】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및 국회 연금특위 추가 논의 지원
 - (기초연금)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
 - *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20% 감액
 -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 개선
 - *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5년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 * (현행)퇴직연금/퇴직금 중 선택 → (개선 예)소사업장 퇴직연금 규모별·단계적 의무화
 - (주택연금)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26.上)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

- 장애인 주간돌봄^{발달장애인}·일자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강화

② 청년·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 생활비 경감 】

- (식비)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별 확대
-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개선
 - * 현재 기초수급자 가구 중 임산부, 7세 이하 유자녀 등 가구 지원중
- (통신)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 데이터 제공량 소진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 (교통)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해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 * 현재 131개 시·군·구 시범사업중 / ** 역량있는 요양병원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주거안정 】

-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20만원, 24개월)을 상시화하고,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적용
 - *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부부의 월세액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원)
- 주방·휴게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자산형성 】

-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방안 검토

◇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①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

- 아동수당(月 10만원)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現 중위소득 63% 이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1~2학년^만 9세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 완화

②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근로자 지원)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 기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
- (사업주 지원) 각종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 대체인력지원금(現 월120만원) 및 업무분담지원금(現 월20만원) 지원 수준 확대 등

- (아이돌봄 지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소득기준 완화(現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등으로 이용가구 확대

** 민간 등록제 시행('26.4월)에 따른 등록기관의 서비스 역량 제고 지원 등

- (노동시간 단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주 4.5일제 확산 유도

3 청년·고령층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청년】

- 근본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예) 가칭이노-AI아카데미, AI마에스트로 사업 참여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AI 특화 직업훈련 과정 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등

-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 검토

※ 청년 ①생활비 경감, ②주거안정, ③자산형성 등 종합적 지원 강화

* ①천원의 아침밥 확대, 교통패스 도입 등 ②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등 ③청년납입+정부매칭 지원

【고령층】

-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전직·재취업 지원

* 현재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중

-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 자리를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3. 공정한 성장

◇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성장유인 제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탈취 대응 강화

【불공정 거래 해소】

-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대상 확대*
 - * (현행)주요 원재료 비용 → (추가)에너지 비용<전기, 가스 등>
-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구제를 위해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금지청구소송) 강화*
 - *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확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
-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25년→'28년)
 - * 세액공제율(%) : (15일내 지급) 0.5 (16~30일) 0.3 (31~60일) 0.15
 -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상생결제 연계기능을 추가해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대

【기술탈취 대응 강화】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을 제고하고, 기출 탈취 시도 억제
 - *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및 피해 입증
-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 * 법원 요구 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 동시 신설
-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
 - * 손해액 산정 방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② 핵심 인프라 전면 정비, 협업구조 확립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인프라 정비】

-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현행)위탁·수탁기업 간 → (개선)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확대

- **(동반성장평가)** 기업 신인도·이미지 핵심 지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표 고도화**

* (현행)대중견 239개/공공기관 134개 → (개선)대중견 은행 및 온라인플랫폼 등 추가(~'26)/공공기관 공공기관(~'30)

** 업종별·기관성격별 특화지표 개발 및 최근 이슈 지표 추가 등 평가 변별력 제고

-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은행간 안정적 동반성장 도모

*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부터 단계적 확대(~'26)

-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일몰 연장('25→'28년) 등 통해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유도(현재 年 2,000억원 수준)

【대·중소기업 협업 확산】

- **(교육훈련)**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年 3,000명 양성 목표)

- **(협력모델 확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기술나눔** 등 대·중견·중소기업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모델 확산·지원

*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시 협력 스타트업 대상으로 PoC,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 보유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 근로여건 격차 해소, 권리보호 강화 등 공정·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임금격차 완화 】

-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 등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 근로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26.下)
-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을 연장('25→'28)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 지원,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現 최종 3개월의 임금)

【 비정형근로자 보호 】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등 단기근속 관행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 *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 원·하청 상생 】

-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노동조합법 개정)

②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 강화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 (현행)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만 참여 → (개선)하청업체 노사도 참여
 - ** 발주자 외 원청에도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의무 신설
- (적극적 위험예방)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 및 야간 노동규율 강화 검토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병행
- (산재 적극 보상)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요양·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 * 발생빈도가 높아서 선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확대

【 제재 강화 】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 도입
 -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시 감점 신설**
 - * 예) [현행]동시 2명 사망시 → [개선]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시
 - ** (현행)건설안전 심사 항목 세부 심사 요소에 사고사망만인율, 보고 위반건수, 예방활동 실적 중심 → (개선)중대재해 위반시 감점 항목 명시
 -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권의 관련 자체 대출심사 기준 등 추가 개선방안 강구
 - * (현행)ESG 평가기관 각각 자율 반영 중 → (개선)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명확화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시 제재조항 신설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 금융·규제·공공부문을 추격경제 → 선도경제로 대전환해 **성장기반 확충**

1 생산적 금융

◇ 부동산 →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 (상법 안착)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 (합병·분할 등 제도개선)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 (현행)최근 주가 산술평균 → (개선)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고려해 공정가액 산정
-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배정
-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 보장
-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공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현재는 재량규정)

-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사건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화
- (상장폐지) 상장유지 요건(시가총액, 매출액 등)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 적시 퇴출

【 디지털자산 】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현물 ETF 제도화

2 증시 수요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증시 수요기반 확충 】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
 -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탁원·거래소 등 참여
-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퇴직연금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現 30인 이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조정)

【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일정기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 제도 도입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활력 제고

① 시 대전환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 개선

- (신산업규제 해소)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 예)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요건 완화 등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은 법령정비 의무 강화*로 신속 추진 뒷받침
 - * 예) 임시허가 만료 전 법령정비 완료 의무화, 실증특례 만료 전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완료 의무화
- (지역발전 규제 해소) 제조업·에너지 등 지역발전 애로 해소
 - * 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활성화를 위한 발전설비 참여요건(On-Site) 완화 시행중
- (그림자규제 해소) 지자체·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투자 프로젝트 병목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 해소
 - *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내부지침·행정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

②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및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규모별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현장의견 등을 고려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
- (네거티브 규제) 국가 핵심 신산업 중심 네거티브 규제 단계적 전환
 - 법령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입법 전환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
- (메가특구 도입) 대규모 지역 단위 '메가특구' 도입 추진
 - * 광범위한 규제특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 (거버넌스)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확대
 - * 특례 부여실증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정, 진입규제 관련 갈등 조정 등
- 중앙-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예: 시도경제협의회 활성화)해 규제 정보공유

③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 방지

-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되, 민사상·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 개선
- 국민 개인에게 불편·과도하게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위반사실(문서 보관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

⇒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TF」(8월~)을 통해 기업·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마련

- ① 신속추진 가능 현장체감형 선도과제 우선 확정·발표(8월말~9월초)
- ② 1차 과제는 9월 중 발표(선도과제와 함께 정기국회 제출)하고,
③ 2차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3 공공부문 대혁신

◇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전방위 혁신으로 **초혁신경제** 뒷받침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초혁신아이템을 선택해 예산·인력·조직* 등을 집중 투입

* 예) 기관별 AI 담당부서 지정(기존 조직 구조조정) 등

① **(재정)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재정제도 혁신 등 성과중심 재정운용**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투자**】

□ 초혁신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低성과 부문은 구조조정

⇒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선순환 구현

- ① **(수립)** 초혁신프로젝트* 등 고성과 부문에 선택·집중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차년도 지출한도 배분시 반영해 성과 극대화

* 스마트농업(농림부), AI 로봇·가전(산업부), AI드론(국토부), 스마트수산업(해수부) 등

- ② **(집행)**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투명한 국고금 관리
(한국은행과 협력해 시범사업, '26.上)

- ③ **(평가)** 多부처 운영*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성과·지출구조조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환류

* 재난안전(행안부)·일자리(고용부)·중소기업지원(중기부)·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위) 등

【 재정제도 혁신 】

- **(예타)** R&D는 예타 제외하고, 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타 면제
- **(조달·계약)** 초혁신제품·서비스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

* 계약유형 : (전통방식)경쟁입찰원칙 → (혁신조달)수의계약, 규제샌드박스 등

활용예시 : 일반 용역·물품 → AI·드론 등 혁신기술 용역·물품 등

- 미래지향적·도전적 R&D는 비경쟁협약(지정협약)으로 전환
- 초혁신제품·서비스(AI, 로봇, 드론 등) 공공구매 대폭 확대('24년 약 1조원 → '30년 3조원 수준),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 혁신기업 성장지원

* 先구매 後성능검증·인증, 조달계약 기반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도입 등

- **(민간투자)** 대상사업¹⁾을 AI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고, 건설·운영 비용 부담 완화²⁾, 적격성조사 기간 단축³⁾ 등 민간 참여유인 제고

1) 현재는 교통인프라와 하수처리 시설에 민자 대상사업이 집중

2) 건설기간 중 공사비 급등 등에 건설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3) 적격성조사 평균 소요시간('20~'24) : 도로 13.3, 철도 19.9, 환경 12.7개월

② [공공기관] 초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 구축

- (상장 공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 구축

* 예) 해외 우수 전력회사 등과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발굴(한전: 전력손실률 등)

- (그 밖의 공공기관) 안전·재난관리 등 가중치 상향, 국가정책사업 추진 노력 등 공공성과 기술·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을 종합적 평가

③ [연구기관] 초혁신경제 등 국가 임무 해결 중심으로 목표 재조정

- 과기원·출연연구기관의 소규모 수탁과제 수입(PBS)은 단계적 폐지, 국가전략 어젠다와 연관된 대형과제(ISD)로 재편
- 대형과제 성공수행을 위한 쏠주기 관리·지원 및 전담 평가체계 마련
- 대형과제 사업목표 조기 달성 시 연구인력에 파격적 인센티브(보수) 제공

④ [대학] 국립대·사립대 특성화 및 이공계 전폭 지원

- (거점국립대) 지역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및 학점교류 시스템 강화 등 대학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지방사립대) 학과조정 등 지역전략산업 중심 특성화시 인센티브* 부여

* (대학)연구 인프라 구축·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원)겸직 활성화 (학생)장학금 지원 확대

- (이공계) AI 등 첨단분야 학부과정의 산업계 수요 및 융복합 기반 혁신에 적극 투자*하고, 이공계 학생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

* AI 등 특화 첨단분야 집중 육성, 기업연계 등 실습형 과정 확대

첨부 1

한국경제의 실상(상세)

1

성장동력 약화

◇ 추격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중국에 기술 추월, AX·GX 등 산업 대전환 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

□ 기술경쟁력·대외여건 악화로 신산업 발전 지연 및 주력업종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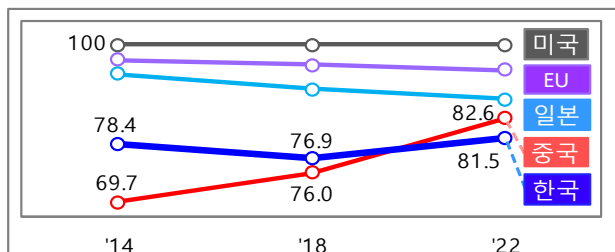
○ 그간 추격형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모방이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혁신 선도에 한계

- 경제규모 대비 R&D 투입지표*는 높은 수준이나, 파급력 있는 성과와 사업화 실적 등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흡

* '23년 韓 GDP 대비 R&D 비중은 5.0%로 이스라엘(6.4%)에 이어 세계 2위(OECD 평균 2.7%, KI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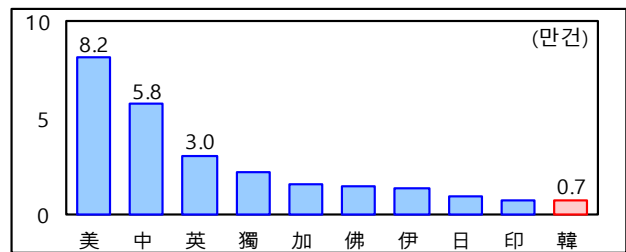
**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사용료(15위), 산업부가가치(10위), SCI 논문 수(12위) 및 인용도(11위)

5개국 기술수준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12~'22년)



* 출처: 한국연구재단

○ 기술혁신 지체 등으로 '70~'80년대 중화학 공업, '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IT 산업 발전에 이은 신성장산업이 부재하고, 중국에 기술추월

*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90년대 이후 신생기업은 1개(대기업 계열 제외시 없음, 미국은 6개)

○ 美 관세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中企는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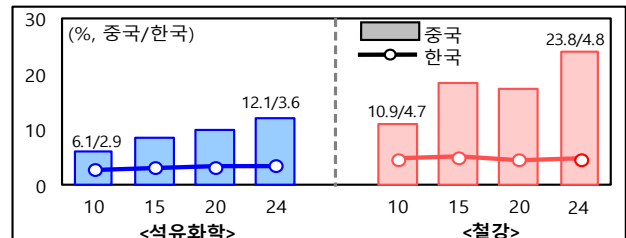
*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 ('24.2Q)5.4 (3Q)4.7 (4Q)3.3 ('25.1Q)2.6

시가총액 10대 기업(음영: '90년 이후 신생기업)

한국(1개)				미국(6개)			
1	삼성전자	6	현대차	1	엔비디아	6	메타
2	SK하이닉스	7	KB금융	2	MS	7	브로드컴
3	LG엔솔	8	현대중공업	3	애플	8	테슬라
4	삼성 바이오	9	두산에너지빌리티	4	구글	9	버크셔해서웨이
5	한화에어로	10	기아	5	아마존	10	JPM

* 출처: 한국거래소, S&P

韓·中 석유화학·철강 글로벌 수출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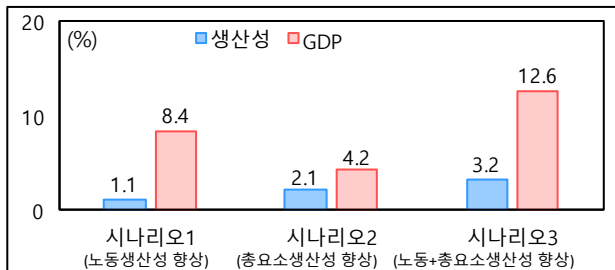
* 출처: UN Comtrade

□ AX·GX 등 산업 대전환 지체

- AI가 경제·사회·안보 등 쏠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 중이나, 우리는 ①AI 기술경쟁력, ②고급인력, ③관련 인프라 모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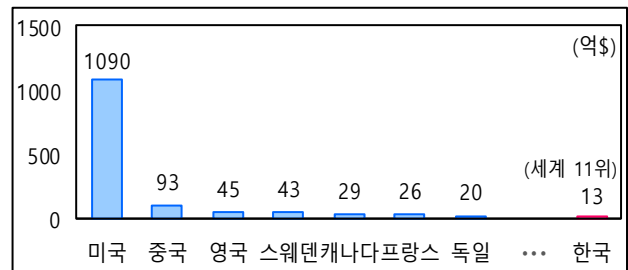
- ▶ ①美 대비 AI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4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中)0.9 (유럽)1.0 (韓)1.3 (日)1.5년
- ▶ ②국내 AI 고급인력은 △1.7만명 부족, 초·중급은 4천명 초과공급(고용부, '23~'27년 인력수급전망)
 - ↳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배출비율(%,'22년, 매크로폴로): (中)47 (美)18 (EU)12 (韓)2
 - AI 인재 순유출입(만명당, 미스탤포드대 HAI): (韓)△0.36<순유출> / (英)0.55 (美)1.07 (獨)2.13<순유입>
- ▶ ③고성능 컴퓨팅자원(H100, '23년, 국가AI위원회): (메타·MS)각 15만개 (韓)2천개(국내 전체)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



* 출처: 한국은행('25.2월)

주요국 AI 민간 투자규모('24년)



* 출처: 미 스탠포드대(AI Index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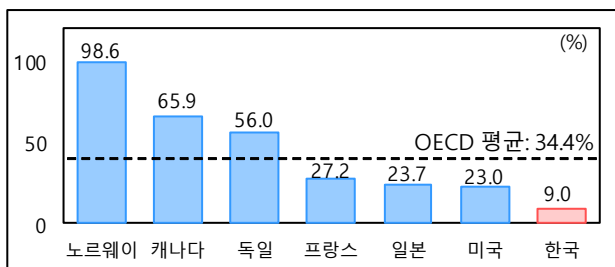
- CBAM, RE100 등 그린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어 향후 수출에 제약 우려

- * EU는 '26년부터 CBAM(역내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 본격 시행 예정
- * 제조수출기업의 28.2%는 거래처가 RE100 요구시 기존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답변(무역협회, '24년)

-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AI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 구축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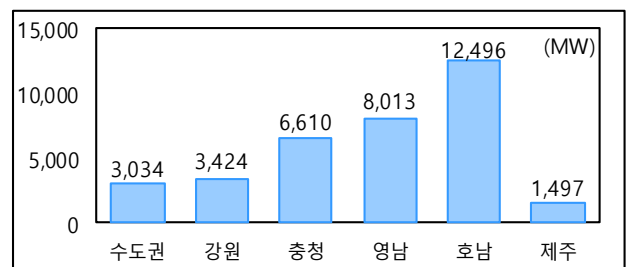
- * 예) 용인 클러스터에 10GW(現 용인시 전력수요의 5배) 이상의 대규모 전력공급 필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24년)



* 출처: IEA (한국은 한국전력통계)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25.6월)



* 출처: 한국전력공사

◇ 비수도권 국민의 49%, 중소벤처 취업자의 89%, 취약계층이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며 성장영역 축소 ↔ 양극화 심화의 악순환

□ 비수도권·중소벤처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서 소외

○ 수도권 인프라·투자 집중으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비수도권의 총생산이 수도권을 하회('15년~)하고, 인구유출로 지역소멸 우려

*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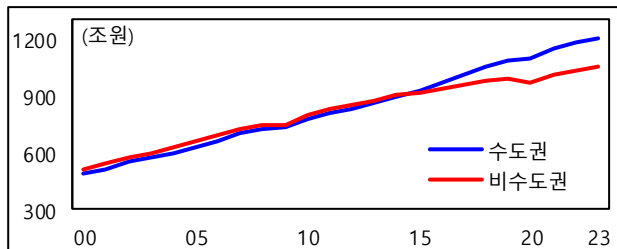
* 수도권/비수도권 투자 증가율(연평균, %): ('00~'11) 4.2 < 5.0 → ('12~'23) 3.6 > 2.0

▪ 정부지원은 낙후도 등 지역별 특성 고려 미흡, 일률적으로 추진

⇒ 수도권 과밀화, 비수도권 공동화 등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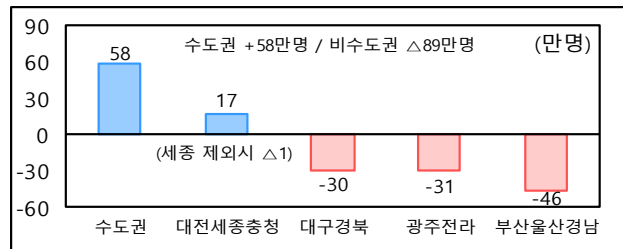
* 비수도권^{대도시} 생산성 1% 향상의 GDP 효과(+1.3%)가 수도권^{대도시}(+1.1%)보다 높음(한은, '24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실질)



* 출처: 통계청

권역별 인구 증감('15→'24년)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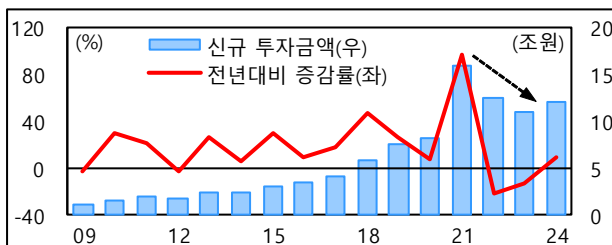
○ 벤처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 투자비중 감소, 유니콘기업이 주요국 대비 적고 신규진입도 감소('21~'22년8→'24년1개)

* '24년 벤처투자 규모는 '21년 정점 대비 75% 수준, 초기 창업기업 투자비중 감소('19년 27→'24년 19%)

▪ 中企 스케일업이 정부 지원 감소*, 기업 성장시 지원 급감 구조로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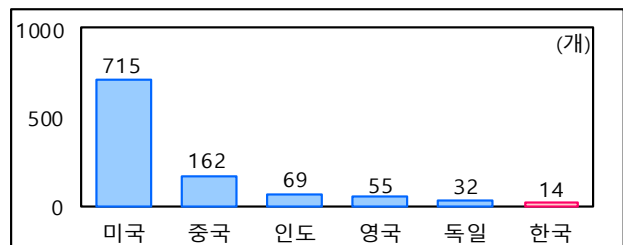
* 중소벤처 모태펀드 정부예산(조원): ('19)0.5 ('20)1.3 ('21)1.4 ('22)0.9 ('23)0.7

신규 벤처투자 추이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



* 출처: CB Insights('25.6월)

□ '소수의 성장' 으로 부문별 양극화와 취약부문 어려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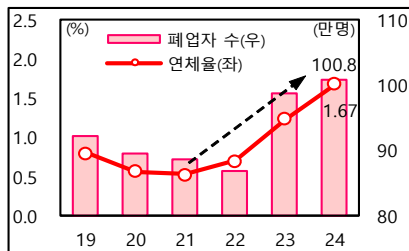
- 수출 중심 성장 속 구조적 내수 위축* 가운데, 코로나 시기 대출 증가 및 이후 금리상승, 디지털 디바이드**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 인구구조 변화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Delta 1.6\text{p}$)에 50%($\Delta 0.8\text{p}$) 기여(한은'25.5월)

**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 82% 공감,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31%(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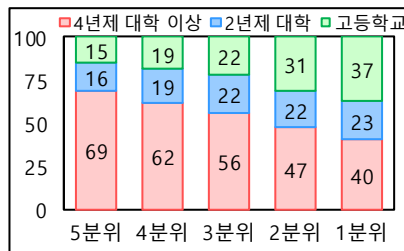
- 저성장으로 청년층 전반의 기회가 축소되는 가운데, 부모세대 富가 자녀학력 등에 영향을 미쳐 청년층 간 기회격차 확대(\rightarrow 고용률 \downarrow , 쉬었음 \uparrow)

자영업자 연체율, 폐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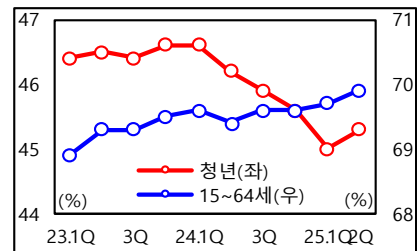
* 출처: 금융감독원, 국세청

부모 소득분위별 자녀 학력수준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3년)

15~64세 및 청년 고용률



* 출처: 통계청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 간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저소득층·고령층·취약차주 어려움 가중

* 5분위배율 : ('22.1Q)6.20 \rightarrow ('25.1Q)6.32 / 순자산지니계수: ('22)0.606 \rightarrow ('24)0.612

** 1분위 소득 1년전보다 감소(25.1Q $\Delta 1.5\%$) / 노인빈곤율 OECD 1위('22년 39.7%) /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7.2^{22년} \rightarrow 9.9%^{24년})

\Rightarrow 경제활동 참여, 인적자본 축적 등 경제의욕이 저하되는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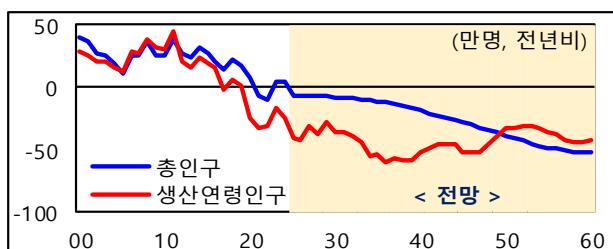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오너스(Onus) 본격화 예상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 잠재성장률 하락

- 내수기반 약화, 노인부양비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등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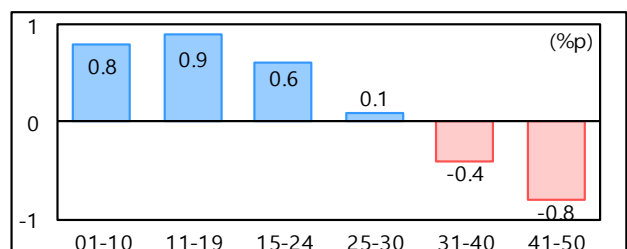
* 노인부양비(%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 $\times 100$): ('00~'09)12.3 ('10~'19)17.3 ('20~'29^e)28.7 ('30~'39^e)47.0

총인구·생산연령인구 증감(중위 추계)



* 출처: 통계청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 출처: KDI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로 혁신 인센티브 약화

□ 시장지배력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기술탈취 관행 여전

○ 불공정거래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24년)를 도입했으나 한정된 적용대상 등으로 효과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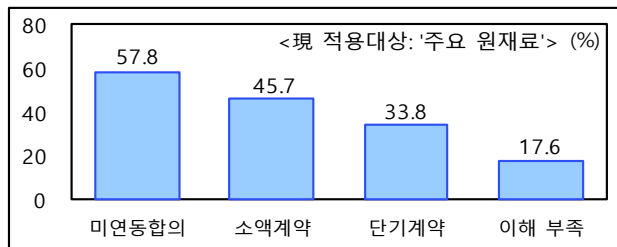
* 민간기업 납품시 애로요인(% , 중기부, '23년): (납품단가 인하요구)59.5 (납품대금 지급지연)26.0

○ 거래·협상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관행*이 여전하고, 증거확보·피해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에 한계**

*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23년 기준, 중기부 추정): (건수)299건 (평균 손실액)18.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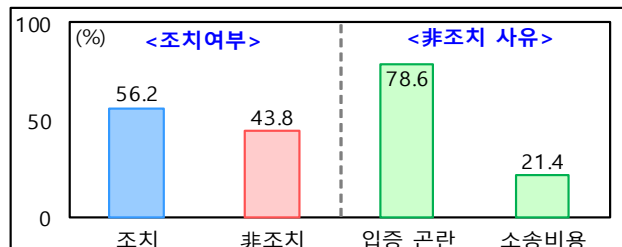
** 소송 장기화(1심 판결에 평균 1년 이상), 낮은 승소율(32.9%)·청구인용률(17.5%) 등 법적구제에 애로

납품대금 연동제 미반영 사유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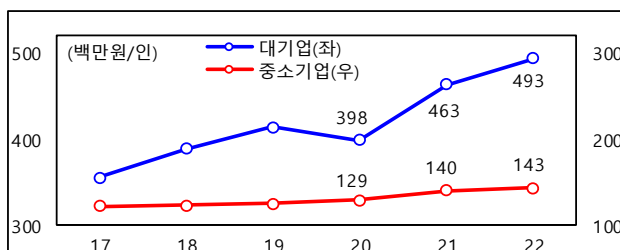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대응현황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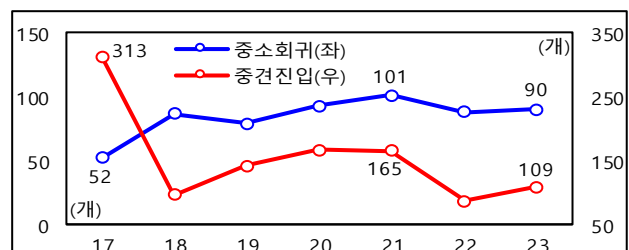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혁신유인이 약화되며 경쟁력 하락, 스케일업 제약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제조업)



*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중견기업 진입 + 회귀 기업 현황



* 출처: 중견기업연합회('24년)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노동환경 안전 취약

○ 대-중기,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수준 등 근로여건 격차 확대

* 대기업 정규직(=100) 대비 임금 수준(%), 시간당 임금 기준, '21→'24년)

: [대기업] (비정규직)69.1→62.3 / [중소기업] (정규직)58.6→57.7 (비정규직)45.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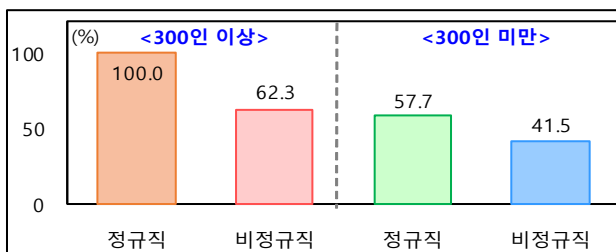
▪ 임금체불은 소규모·취약부문 중심으로 사상 최초 2조원 상회

* 임금체불액(조원): ('20)1.6 ('21)1.4 ('22)1.3 ('23)1.8 ('24)2.0 [30인 미만 비중: 71% / 건설업 비중: 23%]

▪ 최근 특고·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권리보장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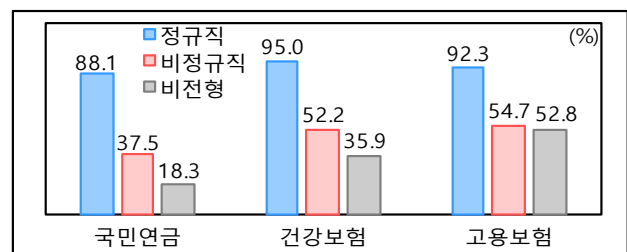
* 특고(만명): ('20)49.8 ('22)56.1 ('24)57.6 / 플랫폼(만명): ('21)66.1 ('22)79.5 ('23)88.3

사업체규모·고용형태별 임금



* 출처: 고용부('24.6월)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출처: 통계청('24.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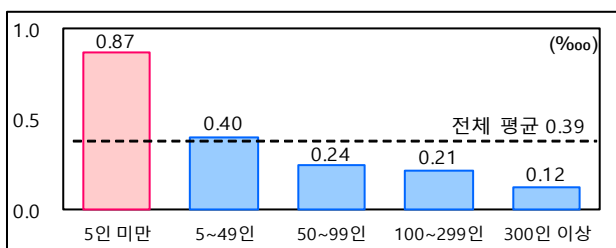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명): ('20)882 ('21)828 ('22)874 ('23)812 ('24)827

▪ 특히, 산업재해가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며 취약부문 근로자의 안전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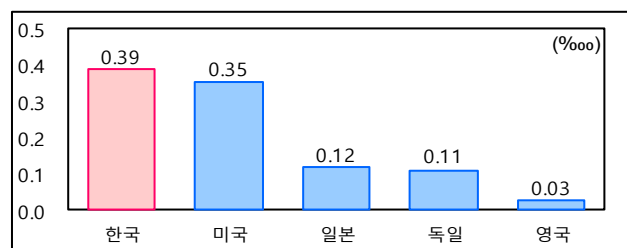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24년): 50인 미만 비중: 81% / 건설업 비중: 40%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수(근로자 1만명당)



* 출처: 고용노동부('24년)

OECD 주요국 사고사망자 수(근로자 1만명당)



* 출처: ILO('23년)

◇ 금융, 규제, 공공 등 제도가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과거 수준 정체

□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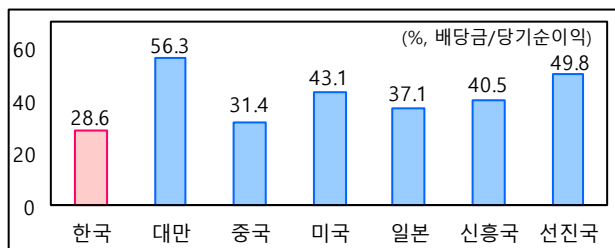
-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합병·물적분할 등 자본거래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부족하고 이사회 독립성도 취약
- 주가조작·시세조종에 대한 처벌·조사에 한계 → 높은 재범률(약 29%)

* SNS, 허위보도 등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확산
→ 정제된 시장감시체계,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 부족으로 신속·체계적 대응에 한계

⇒ 자본시장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며 민간자금이 기업투자·R&D 등 생산적 부문보다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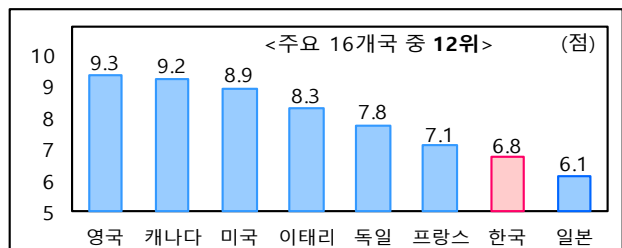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23년): (韓)65.2 (美)32.7 (日)36.4 (英)51.6

주요국 배당성향('15~'24년)



* 출처: Bloomberg

국가별 주주보호 수준('19~'23년)



* 출처: LSEG, 한국은행

□ 낮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력 위축

- 우리나라 경제규제 강도는 규제영향평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진입·행정규제 등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23년) : OECD 38개국 중 20위(순위 높을수록 규제↓)

↳ (네트워크 산업 진입규제)31위 (자격·허가)28위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개 기업이 규제 문제로 국내사업 영위 불가·제한(아산나눔재단, '22년)

-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

□ 전략적 재정투자 미흡, 경직적 재정체도로 재정운용 성과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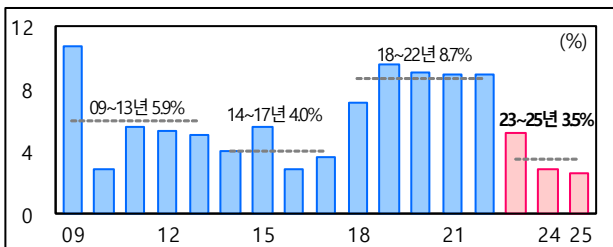
- (재정) 총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 대부분이 의무지출*에 사용되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부족

* 의무지출(조원): ('23)340.3 ('24)347.4 ('25)365.0 <'21~'25년 평균 +8.2%>

- 재량지출은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低생산성·低성과
- 사업구상·기획, 예타 등 사전절차의 긴 소요기간*, 경쟁입찰 중심 국가계약제도도 급변하는 기술·산업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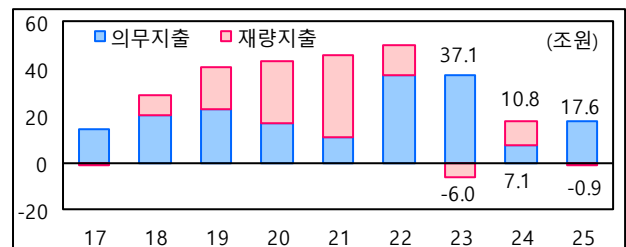
*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평균 2년 이상의 기간 소요

총지출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의무·재량지출 증감(본예산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 (세수) 감세·조세지출 확대로 세입기반 약화

* 조세부담률(%): ('18~'20)18.8 ('21)20.6 ('22)22.1 ('23)19.0 ('24^p)17.6

- (공공기관) 재무성과 중심 평가*, 부채 누증 등으로 경영성과 제약

* 지표별 배점변화(공기업 기준, '21→'24년): (재무)10→21점, (안전·책임경영 등)25→16.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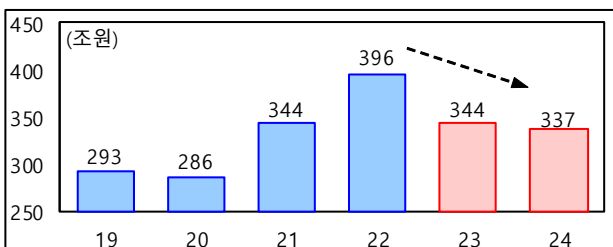
- (연구기관) 소규모 수탁과제* 중심 활동으로 국가임무·대형과제와 괴리

* Project-Based System(PBS): 프로젝트 단위의 R&D 사업 수주를 통해 기관 인건비·운영비 일부 충당

- (대학) 지방대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AI 등 기술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신설·전환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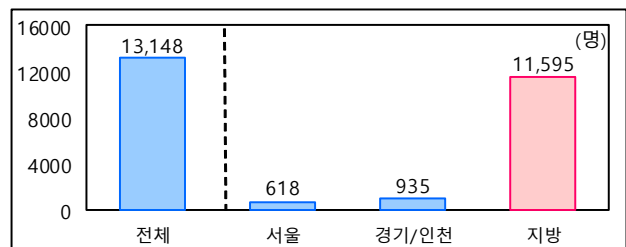
* '24~'28년 신기술분야(디지털, 반도체, 소재·부품 등) 인력 42.8만명 부족 전망(직업능력연구원, '24년)

국세수입 추이(결산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대입 정시 미달인원('24년)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 '25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AI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기재부 등
자율주행 관련 민관합동 정책협의체(얼라이언스) 구성	산업부·국토부
속도제한 등 전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국토부
공공 3대 선도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추진	행안부·국세청· 고용부·식약처 등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과기부·법무부
AI 우수인력 등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스마트 양식단지 선도지구 선정	해수부
가칭 국민성장펀드 세부 조성방안 마련	금융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산업부
RE100 산단 추진방안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산업부·국토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엄격한 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환경부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마련	기재부·환경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수립	환경부·금융위· 산업부
초광역권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로드맵 마련	지방시대위· 산업부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 마련	산업부
연기금투자플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 신설	기재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 보강	중기부
무인주문기기 등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	금융위
착한임대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연장	기재부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의무 완화(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못하도록 개선	금융위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상생협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하도급법 등 개정)	중기부·공정위· 특허청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개정)	중기부·공정위
동반성장지수 지표 고도화	중기부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노동조합법 개정)	고용부
산업재해 근절 위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 확대(국가계약법 개정)	기재부
산업재해 근절 위해 기업 ESG 평가에 반영	금융위
산업재해 근절 위해 금융권의 관련 대출심사 기준 등 점검 및 추가 개선 방안 강구	금융위
상법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법무부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기재부·금융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고용부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법령정비 의무 강화	국조실 등
수출·투자 병목 규제 및 그림자규제 해소 방안 마련	기재부
신구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확대	국조실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중앙-지방정부 간 규제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	기재부
신속추진가능 현장체감형 경제형벌 합리화 선도과제 마련	기재부·법무부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민간 참여유인 제고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상장 공기업/그 밖의 공공기관)	기재부
과기원·출연연 혁신(PBS→ISD)	과기부
관세피해 지원대책 마련	산업부 등
신대외경제전략 마련	기재부·산업부 등
유턴보조금 국비교부율 확대	산업부
유턴거점 확대 및 주요 무역관 내 핫라인 설치	산업부
유턴기업협의체 신설	산업부

2. '26년 상반기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AI 로봇 개발·실증 등 지원	산업부
자율운행선박 2단계 기술개발 추진	산업부·해수부
AI 가전 실증·확산 등 지원	산업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실증 등 지원	산업부 등
AX-Sprint 300 추진	산업부 등
공공 AX 프로젝트 대폭 확대(행정혁신·국민체감형 시범사업 추진)	과기부 등
AI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무 완화	기재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조달청
AX 통합 바우처 공급	과기부
초중고 AI 이해 및 리터러시 교육 추진	교육부·과기부
대학 비전공생 AI 활용 교육 및 일반교양 기본 AI 교육 추진	교육부·과기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고용부
의무복무병 AI 교육 추진	국방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생활밀착형 AI서비스교육 추진	중기부·과기부
전문가 AI 교육(고급실습·문제해결 중심 교육 등) 추진	과기부
AI 교육센터(온·오프라인) 운영	교육부·과기부
AI 경진대회 추진	과기부
국립대 AI교수(비전임) 금전적 인센티브	교육부
AI 분야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우선배정	병무청
AI 대학교원 겸직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부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 신설	과기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전환	개보위
데이터 안심구역 클라우드 전환	과기부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데이터 개방 확대	복지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신설	개보위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문체부·국가유산청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실증특례 추진	과기부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과기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통계 분야 국가 AI 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 마련	통계청
데이터 신기술(합성데이터 등) 개발 실증	개보위
데이터 스페이스 산업별 구축·연계	과기부
전문대학 데이터 특화 기술인력 양성	교육부
저전력 NPU 등 기술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지원	과기부
고성능 AI(Hyper-AI) 네트워크 기술개발	과기부
LNG화물창 소재·부품 고도화 추진	산업부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	과기부
고방열 그래핀 응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부
차세대 특수탄소강 소재·부품 기술개발	산업부
태양광유리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실증·상용화 지원	산업부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선도지구 선정	농식품부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및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 착수	우주청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조성 과제 선정	과기부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 모델(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수립	복지부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중기부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
발전설비 설치 보조·용자 지원 확대	산업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 지원	지방시대위·기재부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문체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	중기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개편	행안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 혁신 단과대학 신설,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지원	교육부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기재부
모태펀드 존속기한 연장(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중기부
제조 AI 플랫폼 고도화	중기부
소상공인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허상권 개발	중기부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 제공	중기부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영세사업자 중심 인하	기재부·국세청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고용부
장애인 주간돌봄·일자리 확대	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강화	복지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적 확대	농식품부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도입	과기부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	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국토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교육부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 개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등)	고용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여가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주4.5일제 확산 유도	고용부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	과기부·고용부
구직촉진수당 확대	고용부
노인일자리 지속 확충 및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단계적 확대	복지부
납품대금연동제 연동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공정위·중기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상생협력법 개정)	중기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단계적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	중기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고용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	고용부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고용부
특고·플랫폼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시 요양·휴업급여 선지급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고용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산업재해 근절 위해 영업정지 요청 대상 확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금융위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 감안해 주식시장 재구조화	금융위
메가특구 도입 추진	국조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투명한 국고금 관리	기재부
지역전략산업 중심 특성화 지방사립대 인센티브 부여	교육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과기부

3. '26년 하반기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AI 드론 운용·교통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국토부
AI 기반 고속연기기술자 현장 전문지식(암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부
AI 자격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	과기부
국내외 탐티어 연구기관간 협력 사업 확대	과기부
AI 우수청년 대상 해외연수프로그램 신설	과기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방안 마련	산업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SiC 전력반도체 후속 기술 연계방안 마련	산업부
뉴스페이스펀드 결성	우주청
K-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통한 투자 확대	문체부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고용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개선	산업부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현실화(상생협력법 등 개정)	중기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시 제재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소액분쟁 사건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금융위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초혁신제품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	기재부

4. '27년 이후 과제

정책 과제	부처·기관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산업부
SMR 기술개발·실증 등 지원	산업부·과기부
20MW+급 풍력터빈 개발 및 상용화	산업부
해외 탄소규제 대응 데이터플랫폼 구축	산업부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고용부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 공개	고용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고용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고용부
초혁신제품·서비스 공공구매 대폭 확대(~30년 2조원 수준)	조달청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신산업 육성 등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경제정책 중점과제 : (1위)민생경제 회복 (2위)기술선도 성장 (3위)공정한 성장^{일반국민}, 모두의 성장^{전문가}

※ 일반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2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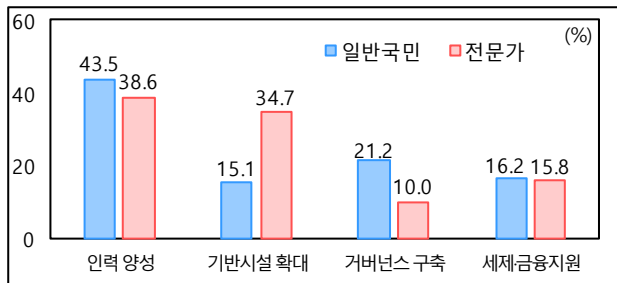
① (기술선도 성장)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AI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국민·전문가}이 우선이라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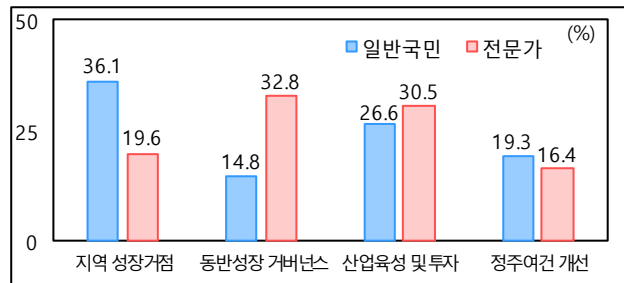
-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국민},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전문가}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

②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성장 거점^{국민}과 동반성장 거버넌스^{전문가},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강조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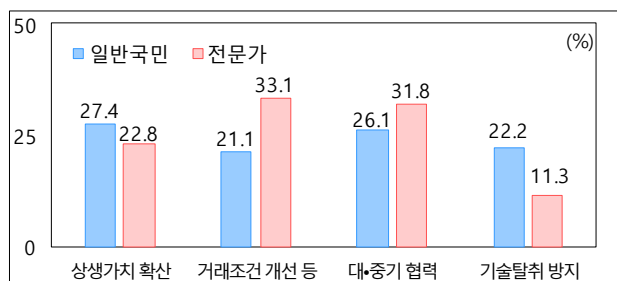
‘지역균형성장’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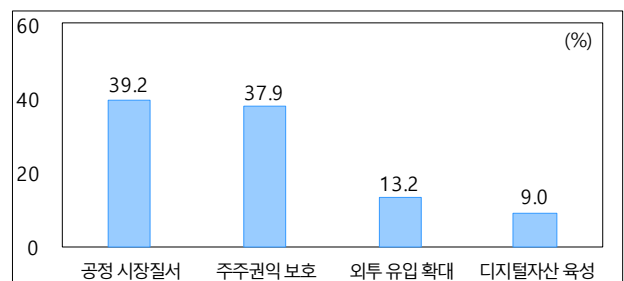
③ (공정한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상생·연대가치 확산^{국민},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전문가}이 우선이라고 답변

④ (지속성장 기반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권익 보호를 지목

‘대·중소기업 상생’ 중점과제



‘자본시장 활성화’ 핵심과제(전문가 대상 항목)



별 지

1. 2025년 경제전망

	2024년	2025년 ^e		2026년 ^e
		【당초】	【수정】	
■ 경제성장률(%)	2.0	1.8	0.9	1.8
■ 취업자증감(만명)	16	12	17	11
- 고용률(% , 15세 이상)	62.7	62.8	62.8	62.9
■ 소비자물가(%)	2.3	1.8	2.0	2.0
■ 경상수지(억불)	990	800	950	800
- 통관수출(전년비, %)	8.1	1.5	0.2	△0.5
- 통관수입(전년비, %)	△1.7	1.6	△0.6	0.5

① (성장)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회복세 확대
'25년 0.9% 성장 전망

○ 하반기에 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추경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소비 중심 성장세 예상

② (고용) 취업자수는 건설·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1~7월(+18만명)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17만명 증가 전망

○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세,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 지속

③ (물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2.0%) 내외 전망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24)80 → ('25^e)70 [1~7월 72] → ('26^e)64

○ 다만, 지정학적 요인(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 상존

④ (경상수지) 상반기 실적 호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800억불)보다 흑자폭 확대(950억불) 전망

⇒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 공고화 되도록 경기·민생 활력 제고,
무역환경 변화 대응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2. 대응방향: 경기·민생 활성화와 무역환경 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1 내수·민생경기 활성화

◇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경제 선순환을 회복하고, **물가안정** 등 민생지원 만전

【경기 보강】

- (재정) 1~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해 연내 전액 집행 추진
 - '26년은 총지출증가율을 '25년보다 확대하되, 지출 구조조정, 기금가용재원 등 활용해 국채발행 최소화
-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및 추경 사업 집행 등 통해 연초 계획 대비 '25.下 +2.0조원 수준 추가 집행
- (정책금융) 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25년 연간으로 당초 계획 대비 +7.1조원 증가한 617.7조원 공급
 -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지신보, 중진공 기준
- (민자사업) '25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확대 (18.7조원 → +1조원 내외)
- (지방 소비·건설)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참 노력 강화 등 지방 중심 소비·건설** 보강 대책 적극 추진
 - * (소비, 8.7일) 릴레이 관광·소비행사, 자매결연, 소비쿠폰 지방우대, 경품이벤트, 방한관광객 유치
 - ** (건설, 8.14일) 1세대1주택 특례지역 확대 등 지방 수요보완,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완화

【물가안정 노력 강화】

- (농축수산물) 수급조절,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피해 최소화
- (가공식품) 식품·유통업계와 소통해 할인행사,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 원가부담 완화
- (석유류) 유류세 인하*,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5.10월)
 - * 인하폭: (휘발유) △10%(△82원) (경유)△15%(△87원) (LPG) △15%(△30원)
 - ** 지급액: (경유)1,700원/ℓ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1,330원/m³ 초과분의 50%(183.21원/ℓ·m³ 限)
- (구조개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수산업 등 농수산업 생산성 제고 추진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경제안보 강화

【 韓美 제조 얼라이언스, 관세 피해기업 지원 및 신대외경제전략 마련 】

- 3,500억불 규모의 대미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 원전, AI 등 전략산업 중심 韓美 제조 얼라이언스 강화
- 美 관세부과에 따른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을 토대로 피해 기업 지원, 수출 바우처 확대 등 관세피해 지원대책 마련(∼'25.9월)
-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사우스 시장진출을 위해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구축해 편중된 수출의존도 완화
 - * 글로벌사우스 아세안·중앙아시아·인도·중동·오세아니아까지 확장, EU 첨단과학기술·공급망 등 실질 협력 확대
 - ** 공적금융기관이 민간재원 활용해 개도국 민간부문 발전 및 기업 진출 지원(지분투자·보증대출 등 리스크 분담)
- 보호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대외경제전략 마련
 -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역량·자원 총 집중
 - * 예) 수출 대체시장 확보, AI 선도국 협력 강화, 외투 유치 질적 제고, 경제안보 제고 등

【 유턴기업 쏠주기 지원 】

- ① (인센티브) 유턴보조금 국비교부율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위험기업 (K6 미만) 보증료율 △0.1%p 추가 감면
 - * 국비교부액 한도 적용기준을 사업장 → 사업 단위로 변경(동일 사업장에 복수의 유턴보조금 수령 가능)
 -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 확대(최대 50→75%)
- ② (유치활동 강화) 첨단·공급망 주요 기업을 선별해 국내복귀를 유도* 하고, 유턴거점 확대(20→25개) 및 주요 무역관 내 핫라인 설치
 - * (국내)찾아가는 유턴제도 홍보·간담회('25.下 8회), (해외)직접 방문 IR(멕시코, 베트남 등) 등 추진
- ③ (국내정착) 1:1 전담 쏠주기 밀착 지원하고, 유턴기업협의체* 신설
 - * (구성)기재부·산업부·코트라·산단공 및 유턴기업 (기능)현장애로 청취 및 제도개선

【공급망 대응 기반 마련】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단가 차액 지원
 - *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일부를 2년간 한시 지원
-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타소비축* 등 민간역량 활용도 제고
 - * 정부가 품목 구매 후 기업 창고에 보관, 기업은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하는 방식

3

리스크 관리 강화

◇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등 잠재리스크를 안정적 관리

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DSR 적용 대상 대출의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총량 안정적 관리
-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정확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화된 여신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관리에도 적극 활용

② 부동산 PF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권 잠재리스크 관리

- 정상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과 함께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여 부동산 PF 연착륙 차질없이 추진
-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PF 사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③ 서민·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

- (공급 로드맵) '30년 末까지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청사·유희부지 등 활용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건설·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 (건설임대)'26년 지원단가 인상률 전년대비 확대 (매입임대)'26년 일부유형 상향 검토

**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 (수요 관리) 주담대,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관리 강화

1. 대외 여건

□ 美 관세충격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 (성장) 상반기는 관세유예 종료 前 조기선적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관세영향이 점차 본격화되며 성장·교역 둔화 예상

* 글로벌 교역량(% IMF, 상품+서비스): ('24)3.5 → ('25^e)2.6 → ('26^e)1.9

- 향후 美 관세 전개양상이 변수인 가운데, 주요국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관세충격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OECD)

		전세계	G20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중국	인도
'25년 ^e	<'24.12월>	3.3	3.3	2.4	1.3	1.7	1.5	4.7	6.9
	<'25.6월>	2.9	2.9	1.6	1.0	1.3	0.7	4.7	6.3
	조정폭(%p)	(△0.4)	(△0.4)	(△0.8)	(△0.3)	(△0.4)	(△0.8)	(0.0)	(△0.6)
'26년 ^e	<'25.6월>	2.9	2.9	1.5	1.2	1.0	0.4	4.3	6.4

- (물가) 국제유가 하락,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불확실성 상존

-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조기 진정됐으나, 관세 여파로 향후 미국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 확대 소지

* 국제유가(\$/b, 두바이유): ('24)80 / ('25.1)80 (2)78 (3)72 (4)68 (5)64 (6)69 [(6.19)77] (7)71

세계경제 물가상승률 전망(% OECD)

		OECD	G20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중국	인도
'25년 ^e	<'24.12월>	3.8	3.5	2.1	2.1	2.7	1.9	1.1	4.2
	<'25.6월>	4.1	3.6	3.2	2.2	3.1	2.8	△0.1	4.1
	조정폭(%p)	(+0.3)	(+0.1)	(+1.1)	(+0.1)	(+0.4)	(+0.9)	(△1.2)	(△0.1)
'26년 ^e	<'25.6월>	3.2	3.2	2.8	2.0	2.3	2.0	1.4	4.0

- (금융시장) 최근 변동성이 비교적 완화되었으나, 관세 전개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2. 국내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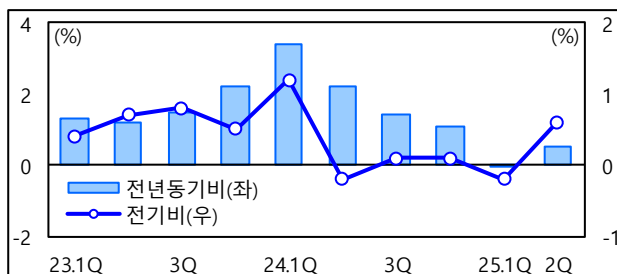
1 경제성장

① [GDP] 실질 GDP 0.9%, 경상 GDP 3.2% 성장 전망

【 실질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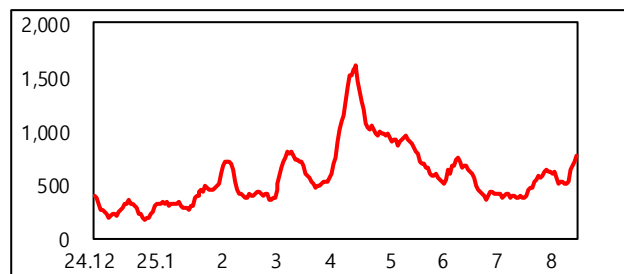
-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회복세 확대로 '25년 0.9% 성장 예상
- 하반기에 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추경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소비 중심 성장세 예상

GDP 실질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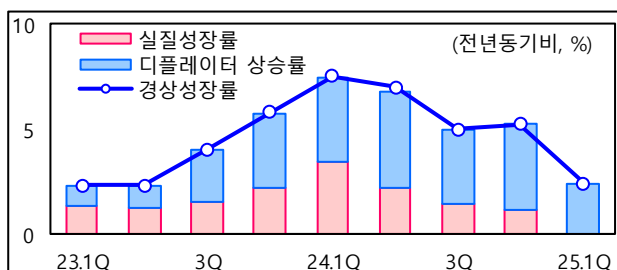


* 출처: Caldara et al(2020)

【 경상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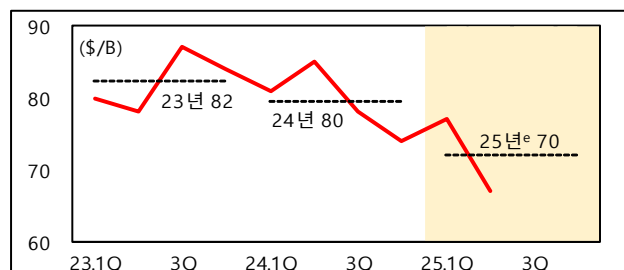
- 경상성장률은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며 '25년 3.2% 성장 전망
- * 경상성장률(% , 당초 → 수정): 3.8 → 3.2 [<실질> 1.8 → 0.9 + <디플레이터> 2.0 → 2.3]
- 디플레이터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반도체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당초 전망보다 상승폭 확대 예상

경상·실질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 출처: 한국은행

국제유가(두바이유)



* 출처: 한국석유공사, 자체추정

2 [민간소비] 연간 1.3%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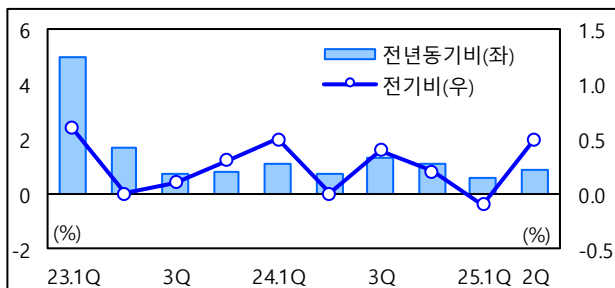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금년 1분기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2분기 증가 전환

*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0.0 (3Q)0.4 (4Q)0.2 ('25.1Q)△0.1 (2Q)0.5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24.11)100.7 (12)88.2 ('25.1)91.2... (4)93.8 (5)101.8 (6)108.7 (7)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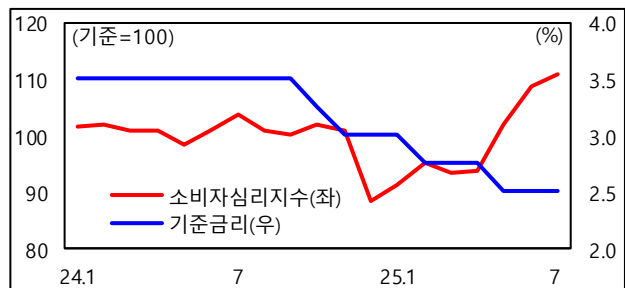
-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 확대가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제약요인

GDP 민간소비



* 출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 및 한국 기준금리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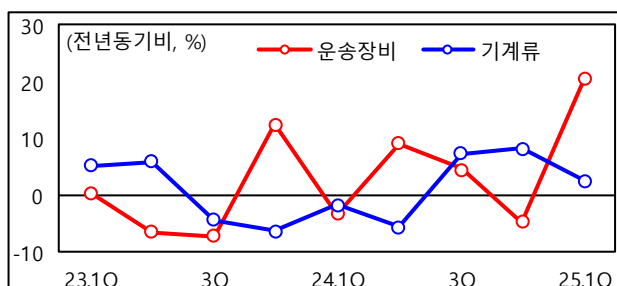
3 [설비투자] 연간 2.0%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급등했던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 투자 조정과 美 관세 불확실성 영향으로 상반기 둔화 흐름

* 설비투자(전기비, %): ('24.1Q)△1.0 (2Q)0.0 (3Q)5.4 (4Q)0.8 ('25.1Q)△0.4 (2Q)△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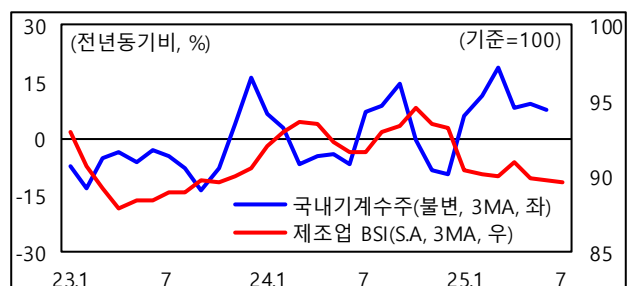
-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 금융여건 완화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비IT 업황 둔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위축 가능성 상존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출처: 한국은행

국내 기계수주 및 제조업 BSI(전망)



* 출처: 통계청

4 [건설투자] 연간 $\Delta 8.2\%$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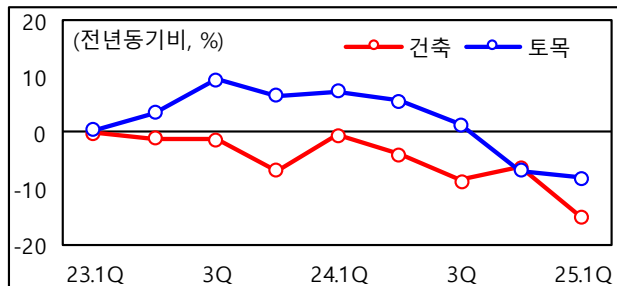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23년 수주·착공 감소 등으로 건축이 부진한 가운데, 토목부문도 위축되며 금년 상반기까지 감소세 지속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 $\Delta 3.3$ (3Q) $\Delta 3.6$ (4Q) $\Delta 4.1$ ('25.1Q) $\Delta 3.1$ (2Q) $\Delta 1.5$

- '24년 선행지표 개선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부진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누적된 지방 주택 미분양 등은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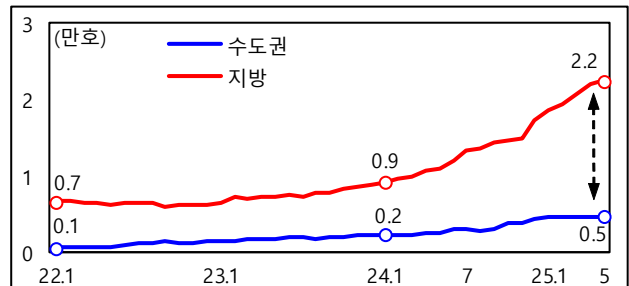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경상): ('23.上) $\Delta 24.0$ (下) $\Delta 12.6$ ('24.上)5.6 (下)15.7 ('25.上) $\Delta 4.5$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비, %): ('23.上) $\Delta 38.5$ (下) $\Delta 24.1$ ('24.上)23.8 (下)14.0 ('25.上) $\Delta 17.4$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 출처: 한국은행

지역별 준공후 미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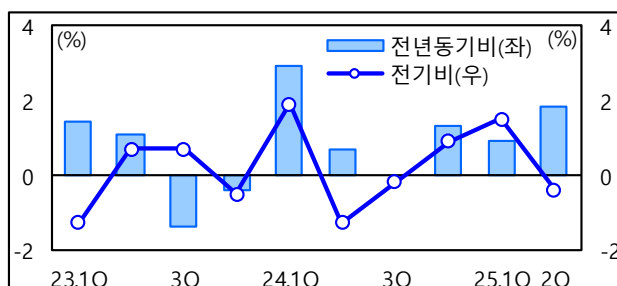
* 출처: 국토교통부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2.4% 증가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 R&D 예산 확대,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 등으로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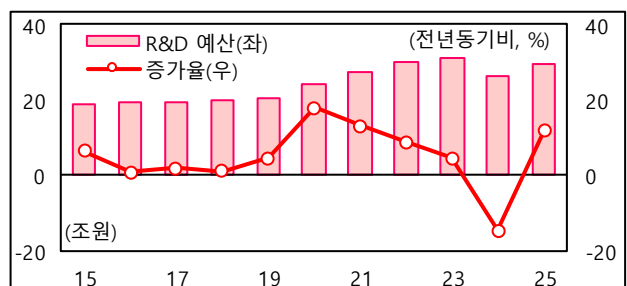
-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은 하방요인

GD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한국은행

정부 R&D 예산 추이



* 출처: 기획재정부

6 [통관수출] 연간 0.2% 증가 / [통관수입] 연간 △0.6% 감소 전망

- (수출) 美 관세부과에도 반도체 호조, 관세유예 前 선수요 등으로 2분기 선방(+2.2%)했으나, 향후 美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

* 통관수출(전년동기비, %): ('24.1Q)8.0 (2Q)10.1 (3Q)10.5 (4Q)4.2 ('25.1Q)△2.3 (2Q)2.2 (7월)5.8

- 반도체·선박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자동차·철강(美 품목관세 적용), 석유제품·화학(유가하락, 글로벌 공급과잉) 등은 둔화 흐름 예상

* 반도체 수출(전년동기비, %): ('25.1) 8.1 (2)△3.0 (3)11.9 (4) 17.2 (5) 21.2 (6)11.6 (7)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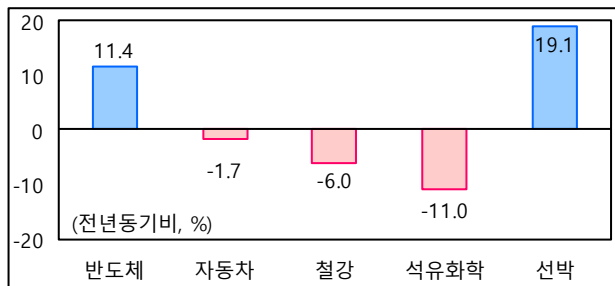
자동차 수출(전년동기비, %): ('25.1)△19.6 (2) 17.7 (3) 1.0 (4)△3.7 (5)△4.5 (6) 2.3 (7) 8.8

- 對美 관세협상 타결(7.30일)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폭 완화됐으나,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 상존

- (수입)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수입 중심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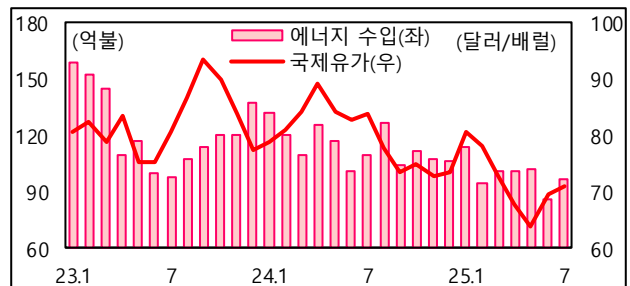
* 통관수입(전년동기비, %): ('24.1Q)△11.1 (2Q)△1.4 (3Q)6.2 (4Q)0.9 ('25.1Q)△1.4 (2Q)△1.8 (7월)0.7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25년 상반기)



* 출처: 무역협회

국제유가 및 에너지 수입액



* 출처: 한국석유공사, 관세청

- (경상수지) 상품수지 호조,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950억불 흑자 전망

* 경상수지(억불): ('24.1Q)165 (2Q)237 (3Q)271 (4Q)318 ('25.1Q)193 (2Q)301

상품수지(억불): ('24.1Q)197 (2Q)262 (3Q)259 (4Q)284 ('25.1Q)192 (2Q)328

- (상품수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큰 폭의 흑자기조 지속

- (상품외수지)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 개선 흐름

* 순대외금융자산(억불, 기말): ('20)4,872 ('21)6,853 ('22)8,005 ('23)8,051 ('24)1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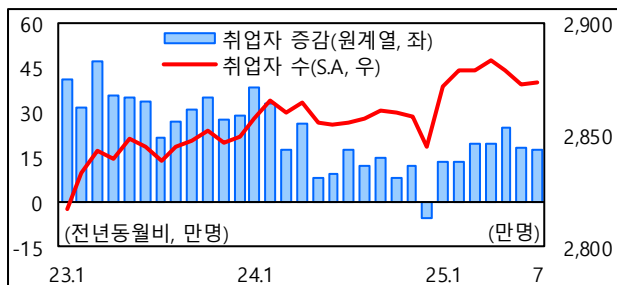
□ '25년 취업자 수는 17만명 증가 전망

- 고용은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당초 예상(+12만명) 상회 전망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4)15.9 ('25.1)13.5 (2)13.6 (3)19.3 (4)19.4 (5)24.5 (6)18.3 (7)17.1
 ↳ '25년 1~7월(월평균, 만명): (전체)18.0 / (서비스업)49.0 (제조업)△8.5 (건설업)△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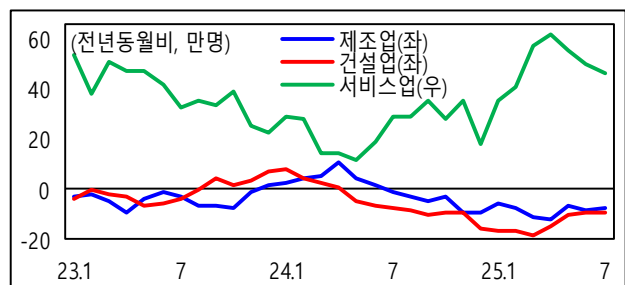
- 다만, 하반기 관세 영향 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속도 등은 취업자 증가세 제약 요인

전체 취업자 추이



* 출처 :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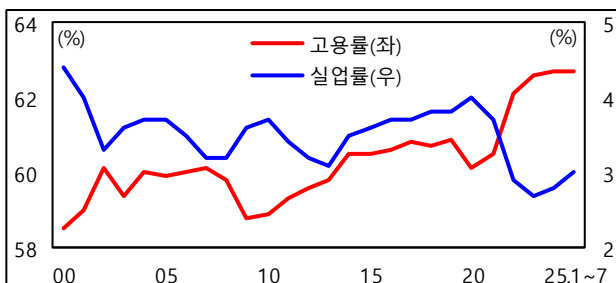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고용률(15세 이상) 62.8%로 상승, 실업률은 보합 전망

- 취업자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은 상승('24년 62.7 → '25년 62.8%), 실업률은 보합('24, '25년 2.8%)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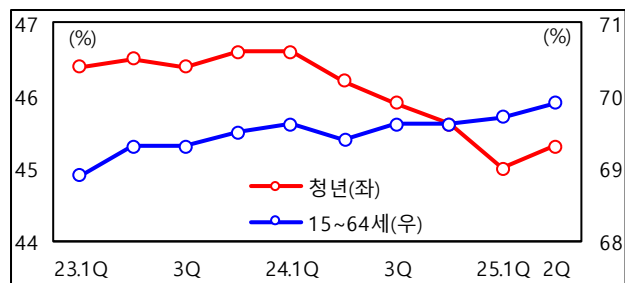
- 다만, 청년층은 고용률 하락, 쉬었음 증가 등 어려움 지속

고용률·실업률 추이



* 출처 : 통계청

15~64세 및 청년 고용률(계절조정)



* 출처 : 통계청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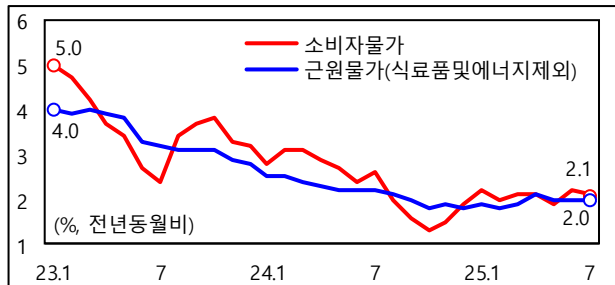
- 상반기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25.1)2.2 (2)2.0 (3)2.1 (4)2.1 (5)1.9 (6)2.2 (7)2.1

-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 내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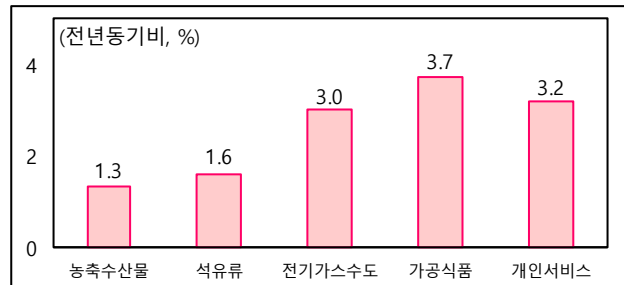
*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25.1)1.9 (2)1.8 (3)1.9 (4)2.1 (5)2.0 (6)2.0 (7)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 출처: 통계청

품목별 물가상승률('25.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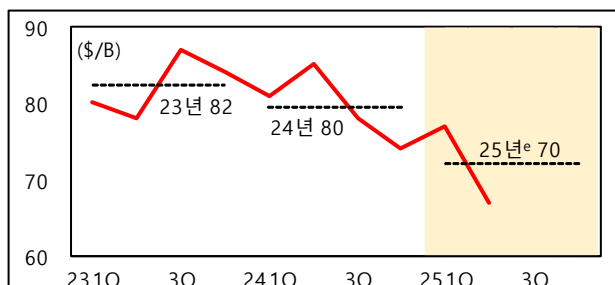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 하반기는 기상악화, 내수 회복에 따른 상방요인과 국제유가 상대적 안정 흐름 등 하방요인 병존

- 다만,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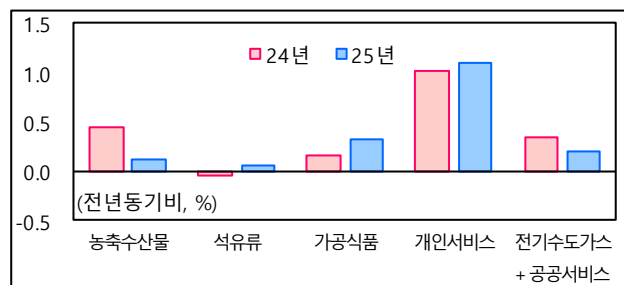
* 러·우 전쟁 및 중동 불안 전개양상, 美 관세 진행상황, OPEC+ 증산 규모 등

국제유가(두바이유)



* 출처: 한국석유공사, 자체추정

품목별 기여도 전망



* 출처: 통계청, 자체추정

2025~2026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24년 실적	'25년			'26년 ^e 연간
		1/4	2/4	연간 ^e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3.3	-	-	3.0	3.1
Dubai 유가(\$/bbl)	80	77	67	70	64
실질 GDP	2.0	0.0	0.5	0.9	1.8
민간소비	1.1	0.6	0.9	1.3	1.7
설비투자	1.7	5.8	4.0	2.0	1.5
건설투자	△3.3	△13.3	△11.7	△8.2	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0.9	1.8	2.4	2.7
경상 GDP	6.2	2.4	-	3.2	3.9
고용률(15세 이상, %)	62.7	61.8	63.5	62.8	62.9
취업자 증감(만명)	16	16	21	17	11
소비자물가	2.3	2.1	2.1	2.0	2.0
경상수지(억달러)	990	193	301	950	800
상품수지(억달러)	1,001	192	328	960	810
수출(통관,%)	8.1	△2.3	2.2	0.2	△0.5
수입(통관,%)	△1.7	△1.4	△1.8	△0.6	0.5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1	1	△27	△10	△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5.7월)